

이명박은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

이것이 국민 다수의 심정이다

천주교 사제들 시국선언문 중에서

6월 10일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6·10범국민대회)에 시청 광장 불허와 방송차량 탈취 등 이명박 정부의 필사적인 집회·시위 봉쇄에도 10만여 명(전국적으로 30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6·10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6·10대회 준비위)의 공식 구호였던 ‘이명박 사과’로는 성이 안차는 분위기였다. 그들 다수는 ‘이명박 퇴진’을 외쳤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져이 쌓여 있는 것이다.

또, 6·10범국민대회 전부터 시작된 각계각층 시국선언은 대학교수뿐 아니라 노동자·청소년·변호사·종교계가 참여했고, 지금도 보건의료·여성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천주교 사제들은 이명박이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며 사실상 이명박 퇴진을 시사했다.

6·10범국민대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이명박 지지율 20퍼센트대, 5년 만에 민주당에 뒤처진 한나라당 지지율 등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 탄압으로 위축되었던 대중의 자신감과 사기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범민주개혁세력의 연대체 건설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6·10준비위는 일시적이고 협소한 기구”이며 “폭 넓은 상설적 반MB연대 기구 만들어야”(〈민중의 소리〉), “반MB 국민전선의 토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지만 “진보개혁세력은 ... 단일한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프레시안〉), “진보세력의 결집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한홍구 교수), “반MB 정당 연합”(손호철, 조국 교수), “1987년 국민운동본부 정도의 연대를 필요”(〈한겨레〉),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견고한 연대의 틀이 필요하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물론 진보진영이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동맹을 주장하며 “차이를 유보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를 발휘”(〈프레시안〉)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진보진영은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에 종속되거나 무비판적일 필요도 없거니와 그래서 안 된다.

또한, 범민주개혁세력의 연대체가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를 넘어 선거연합을 위한 전략적 동맹까지 나아 가면 이명박에 맞선 대중운동 건설이 발목 잡히게 될 수 있다.

실제 NGO들의 연합체인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까지 민주당과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6·10범국민대회 직후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는 큰 틀의 ‘민주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도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을 통한 ‘연립정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도 “반이명박 전선을 위한 연대는 10월 재보선부터”라며 선거동맹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중 운동을 고무하고 투쟁을 집중시켜 그 힘을 극대화하기보다 국회 안으로 조점을 맞추는 효과만 낼 것이다.

▶ 3면에 계속



6월10일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이명박 퇴진”이었다.

사진 이미지

민중의 힘이 이란을 뒤흔들다

새로운 민중의 힘이 이란을 휩쓸고 있다. 약 1백만 명이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 중심가를 행진했다. 많은 이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여긴다. 이 대중 시위는 1979년 친미적인 팔레비 왕정을 몰아낸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 관련기사 5면

이 대규모 시위는 대선 당일[6월 12일]에 발생한 유례를 찾기 힘든 시위에서 성장한 것이었다. 많은 이가 미르 호세인 무사비(穆沙比)의 승리를 점쳤다.

그들은 투표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뒤 현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대선 승리를 선언하자 충격받았다.

무사비 지지자들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란인들은 건물 옥상에 올라 대답하게도 “마르그 바르 디타토르(독재자에게 죽음을)” 하고 외쳤다. 이것은 1979년 혁명의 구호이기도 했다.

토요일[6월 13일] 아흐마디네자드는 테헤란에서 ‘승리 대화’를 열었다. 그러나 테헤란과 다른 지역에서 자생적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우리 표를 도둑맞았다” 하고 외쳤다. 이스파한의 남부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전투 경찰을 내쫓았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란 경찰과 친정부 민병대는 시위 참가자들을 공격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대응해 버스에 불 지르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그날 밤,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비밀 집회를 열고는 계속 시위할 것을 호소했다. 친정부 민병대들이 테헤란대학교 캠퍼스에 쳐들어와 학생 5명을 죽였다.

그러나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다. 정부의 시위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월요일[6월 15일]에 시위를 벌이자는 호소가 퍼졌다. 이때 개혁운동의 주요 기반인 학생과 활동가들을 뛰어넘어 다양한 보통 사람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친정부 민병대들[바시지]이 시위대를 향해 발표해 7명이 죽었다. 그들 죽음은 과거 몰락하는 팔레비 왕정이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했던 잔인한 탄압에 대한 대중의 기억을 일깨웠다.

화요일에 무사비는 정부가 재검표 요구를 받아들이자 추가 시위 계획을 취소했다. 지금 정부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 부통령 무하마드 알리 아브타도 체포됐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란 민중은 자신의 힘과 변화를 목말라 한다는 점을 보여 줬다.

종합

세상을 읽는 17경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의문”
- 현실 감각은 있는 이명박

“인터넷 상에 들어가면 이명박 대통령을 특정 동물로 비유해서 ‘취박이’라고 하는 욕들이 여기 저기 난무하고…”
- 한나라당 신지호

“박연차 수사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있다고 보느냐”
- 물러가는 검찰총장 임채진의 우문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북을 격퇴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 경기도지사 김문수.
과거로 회귀하다가 이제는 북진통일론까지?

“명색이 대학교수들이 작성한 선언문인데 ‘배인’으로 해야 할 것을 ‘배어진’으로 틀리게 표기… 그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
- 시국선언문에 대한 <중앙일보>의 실망

“좌익 사냥을 하며 우리가 즐기고 있어야 할 이때, 왜 우리가 이곳(서울역 집회)에 나와야 하는가”
- 조갑제의 한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겠다… 지도자는 [전두환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강인해야 한다”
- 뉴라이트 이훈구

“16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도원 주차장 앞으로 모여 주시구요. 안 오면 결근입니다.”
- ‘자발적 출근자’들에게 쌍용차 사측이 보낸 문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
-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 회장, 자살 권하는 정부와 그 하수인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말하는 시국선언과 4대강 사업

“국민을 속이는 독재 정부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김정욱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보며 1987년 6월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국선언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명박 정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 특히 이명박 정부의 환경파괴를 비판해 왔는데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독선적이고 그 정책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 거짓으로 차 있어요. 도대체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라든지 관련 인사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감사는 데서 도가 지나칩니다. 이게 뭐 감사도 보통 감사가 아닌 거예요.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감사만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을 허물을 덮어씌워 쫓아내는 것이나 언론을 자기 맘대로 장악하려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드러나니까. 이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 때려잡으면 분신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겠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되게 하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시국선언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불의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멀쩡한 강을 다 갈아 엮어버리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대운하 사업을 비판해 온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를 만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계기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김정욱 교수는 7월 23일~26일에 열리는 다함께 주최의 진보포럼 ‘맑시즘 2009’에서도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녹색 성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겠다는 건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낙동강 바닥을 4억 4천만 입방미터를 파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일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거죠. 이전 운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큰 죄악입니다. 자연과 하늘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둘째로 대운하 당시에도 낙동강을 깊이 6미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똑같아요. 경인운하도 처음에 폭 80미터로 운하를 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운하 반대하니까 홍수 방지하는 방수로 공사라고 이름 붙여서 폭을 80미터로 팠거든요. 공사가 다 끝나니까 이전 운하다 하고 이름 붙였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너무 속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 움직임을 봐도 그래요. 영남 5개 지자체장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한다고 예산 34조 원 요청했죠. 경기도에서 한강 뭐 한다고 23조 원 신청했죠. 충청도에서 금강 한다고 7조 원 요청했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큰 예산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낙동강 유역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낙동강 운하라고 내 뱉습니다.

세상에 참 사기꾼도 엄청나게 많지만 나중에 들롱날 게 뻔한 거짓말을 왜 할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운하 할 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거하고 속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녹색 성장도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산업을 만들 게 없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명박 정부가 언어를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는데 내용을 봐야 해요. 4대강 사업만 해도 대운하 비판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하천 정비라고 했다가 여태 다 했는데 왜 또 하천 정비냐고 비판하니까 이름만 살짝 4대강 사업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게다가 UN에는 4대강 사업을 영어로 ‘River restoration’이라고 등재해 뒀어요. 이건 개발로 망가진 하천을 생태

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되먹지 않은 거죠. 우리만 속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상대로 속이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녹색 성장이라고 하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들어 있지도 않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비판과 요구들을 받아 들일까요?

그 사람을 보면 스스로는 들을 것 같지 않아요.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데 다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이전 독재도 엄청난 독재라고 생각해요.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만 바뀔 거예요. 지난해에도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랬거든요. ‘저 분은 그냥 운하한다고 말 안 하고 운하를 팔 사람이다.’ 그 말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인터뷰·정리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6·10 대회 참가자들

사진 임수현

플라주 ④

플라주는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데 다양한 세상 사는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민주주의 쟁가

일루전

최저임금을 먹고살 만큼은 올리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퍼센트(시급 5천1백50원, 월 1백7만 6천3백50원)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월 78만 7천9백20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조사한 1인가구 생계비 1백47만 4천1백70원과 비교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턱없이 모자라다.

게다가 통계청이 조사한 2008년 연간 품목별 소비자출 증가율을 보면 난방비는 24.6퍼센트, 사교육비는 15.3퍼센트, 육류는 10.2퍼센트 늘어났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야비하게도 기업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던 날 은근슬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했다.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온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도 개악하려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OECD와 ILO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들은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난리치지만 시간당 고작 2천1백35원 인상된 것에 불과하

다. 1988년 이후 GDP는 7.47배 늘어났지만 최저임금은 6.91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성장의 열매를 기업주들이 더 많이 챙겨간 것이다.

민주노총은 6월 19일부터 최저임금 현실화 도심 캠페인을 벌이고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회의가 열리는 6월 25일에는 1박 2일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인 여성연맹은 6월 19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술단지를 걸고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투쟁에 연대하자.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한반도

한미정상회담과 “전략 한미동맹”

“확장 억지”는 핵 공포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억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평화와는 거리가 먼 위험천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바마 정부 또한 이 점에서는 전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북핵 대응에서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 한마디 언급 없이 온통 제재와 협박 기조로 일관했다. 이미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재와 강경 대응은 ‘북한 위협’을 더 키워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뻔한 데도 말이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선언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제공을 명문화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핵 없는 세계’ 구상을 내놓은 오바마는 결국 한 입으로 두 말한 꼴이 됐다.

미국이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는 ‘확장 억지’ 수단으로 거론되는 무기들은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 평화의 중대한 위협”이라던 미국이 북한 무기보다 압도적 파괴력을 지닌 무기들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북한이 그 위신을 꼬집고 반발해 추가적 강경 대응의 명분으로 삼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이미 미국은 1956년부터 정전협정 조항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온 바 있다. 1991년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거한다고 선언했지만, 지금도 한반도 인근에서 유사시 지원 가능한 핵무기만 수백 기에 이른다. 1990년대 이래 미국은 북한에 대한 모의 핵공격 훈련을 계속해 왔고, 게다가 부시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계획까지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미국의 핵 위협 공포에 떨어야 했고, 북한 정권은 이를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번에도 북한



6월 15일 한미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려 하는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사진 임수현

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핵전쟁 위험”이라며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천명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우산은 부족하기는커녕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제공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핵우산 제공을 정상회담에서 명문화하게 됐는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보다 ‘남한 위협’이 더 신경 쓰였던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1956년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했지만,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한 것은 1978년이였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미중 수교 가능성 때문

에 미국의 핵우산을 불신하면서 독자적 핵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렀던 때다. 1960년대 초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 명문화 때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명문화는 바로 박정희의 독자적 핵 개발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핵우산 제공을 노골적으로 밝혔을 경우, 의도치 않게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명문화한 것은 최근 남한 우파들 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 개발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로 북핵 대응에서 한미 간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한미 간 이해관계의 균열을 봉합하려는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의 핵주권론을 지렛대로 이용해 미국과 공조를 과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반도 주변은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위험천만한 지역으로 변하게 돼, 동아시아의 평범한 민중은 핵전쟁 공포에 시달리게 됐다.

침략동맹화한 한미동맹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양자 · 지역 ·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한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한미동맹이 한반도 지역에 국한해 있었다면, 이제는 동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동맹의 무대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런 전략 한미동맹 구상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다. 이는 미국과 남한의 처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냉전 해체 이후 유일 초강대국이 됐지만, 동시에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화됐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동맹들이 더 커다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한편 남한 지배계급은 미국과 동맹을 통해 세계 곳곳에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싶어 했다.

전략 한미동맹 구상이 이미 추진된 사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이 있다. 이는 전략 한미동맹 구상의 핵심 내용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돼 있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주로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지역의 작전과 더 나아가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적 차원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군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택과 제주의 두 기지가 바로 주한미군 기지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되면 이 기지들은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군사 작전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파병 또한 한미동맹을 세계적 무대로 넓힌 것이었다. 이 파병들은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등에서 끔찍한 학살과 생활 기반 파괴를 가져온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과 점령에 협조한 것이다. 전략 한미동맹 구상은 이처럼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명분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 각지에서 침략적 구실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며 그 여지를 열어 놔다.

한미 정상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선언했는데, 범세계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나 그에 일조하는 두 국가가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런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부시를 달아가는 오바마와 한국판 부시인 이명박

사진: 조영준

▶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은 ‘추도 정국’ 속에 반이명박 정서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개혁적 연사를 늘어놓고 있지만 6·10범국민대회 이후 국회 등원을 저율질하며 대중 행동과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 다수가 ‘독재 타도’, ‘명박 퇴진’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를 퇴진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민주당 정범구)며 6·10범국민대회 공식 구호로 ‘이명박 사과’를 고집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를 발휘한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조차 ‘이명박 사과’는 약하다며 ‘사죄’ 정도로

바꿀 수 있다고 했음에도 거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범국민대회 참가자 다수가 ‘이명박 퇴진’을 외치며 분노를 표하자 적잖은 부담을 느낀 듯하다. 시민단체연대회의 오광진 정책팀장은 “대통령 퇴진 등의 주장까지 받아들이긴 힘든 입장”이고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한겨레〉)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6·10범국민대회 준비과정에서도 ‘거리의 정치’에 대한 일관된 거부감을 표했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6·10대회 준비위 문건에 있는 ‘반(反)이명박’ 문구를 ‘비(非)이명박’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문구 삭제제를 요구하

기도 했다. 또, 이명박이 시청광장 불허 방침을 천명하자, 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참여연대, 녹색연합, 한국청년연합은 평화적 문화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동사거리 골목 안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조차 민주적 권리의 상징인 시청광장 사수를 주장했고, 경찰 차벽에 막히면 대한문 앞 도로를 막고 범국민대회를 강행하자고 주장했는데 말이다.

‘거리의 정치’에 대한 거부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촛불항쟁의 교훈을 “아무리 거리에서 외쳐도 이명박 정부가 듣지 않는다는 사실”로 일반화하며 대중적 분노의 에너지를 제도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항쟁은 거리 시위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발전할 때 효과적으로 운동의 요구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투쟁의 진정한 과녁인 ‘이명박 퇴진’으로 모아내지 못하면서 방향을 상실했던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또, 촛불항쟁의 실종된 고리인 노동계급의 조직적 동참 부재도 한몫 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 주요 활동가들이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범국민대회의 의미를 삭감”시킨다며 불평을 늘어났지만 대량 해고에 맞서 점거 파업중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투쟁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6·10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했다. 이것은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과 경제 위기 고통전기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합 가능성을 언뜻 보여 준 것이다.

6·10대회 준비위가 6월 MB약법 저지를 위해 ‘민주회복 범국민위원회’(가칭)로 한시적 전환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명박에 맞선 민주적 권리 수호와 경제 위기 고통전기에 맞선 투쟁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최영준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의 일원으로 6·10범국민대회 건설에 이바지했다

종합

민주주의 수호와 한국 사회의 변혁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각계 반정부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정서가 광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를 ‘독재’, ‘파시즘’ 정부로 묘사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구호가 “독재 타도, 명박 퇴진”이다. “이명박이 독재”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대중 정서에 깊이 공감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권위주의적 억압을 강화한 것은 맞지만, 이 나라를 1987년 이전의 독재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아니다. 지금이 야당 지도자들조차 탄압 받고, 의회·선거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은 아니다.(이명박 정부가 모든 노동조합을 분쇄하고 이주노동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는 파시즘 정권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과거 회귀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1987년 항쟁 이래로 민주화를 지탱해 온 노동계급의 조직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도 우파들은 노무현 탄핵이라는 반동을 시도했지만, 거대한 저항에 직면해 실패했다.

그런데 진보개혁세력 다수는 이명박 정부를 ‘독재’라고 규정하며 특정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데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를 따지기보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며 1987년 항쟁 당시 ‘민주헌법정착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전 국민적 단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를 명백히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명박의 권위주의적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을 제기하고 있다. 박원순 회담제작소 상임이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는 큰 틀의 ‘민주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고, 〈프레시안〉, 〈한겨레〉 등도 반 MB 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이명박이 민주당이 지지하는 수준의 민주적 권리조차 공격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이명박 운동의 적극적 동참자인 상황에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공동행동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급진좌파처럼,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으며 민주적 권리 옹호를 위해 투쟁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문제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위로



5월 30일 범국민대회 촛불항쟁의 경험은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이미진

부터 계급연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운동을 강화해 노동계급이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반신자유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지난 두 자유주의 정권은 불철저했다. 그들이 표방한 “민주적 시장경제”가 자본의 이해관계가 침해될까 봐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존속, 한미FTA 반대 시위 원천봉쇄 등은 그 예다.

민주당은 집회시위 권리 제약 등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권위주의 정권 퇴진 등과 같은 더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나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반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구에서는 노동계급과 대립하는 편에 설 것이다. 촛불항쟁 때 민주당이 거리에서 가장 먼저 이탈해

의회로 간 전력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민주주의 개혁에서조차 굽뜨고 타협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주당과 동맹을 지상과제로 삼고 민주주의 투쟁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경우, 노동계급의 투쟁이 민주당의 요구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과 동맹을 추구해 온 운동 내 개혁주의자들은 노동계급 운동이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한다. 그래서 지난해 촛불항쟁 때 최장집 교수는 “정권 퇴진 운동은 잘못”이라고 했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내 개혁주의자들도 퇴진 요구를 한사코 채택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 투쟁의 목표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 지난해 촛불항쟁과 그 연장선에 있는 현재의 반정부 투쟁은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촛불항쟁에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 다수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대운하, 의료민영화 등을 왜 국민의 뜻을 거슬러 이명박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즉,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재벌천국 서민지옥”, “강(남평)부자 정권”이라는 말은 바로 이 점을 꼬집는 것이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선거에서 잠깐 투표할 수 있을 뿐, 평상시에는 정부가 우리 뜻을 거슬러도 간섭하기 어렵다. 일터에서 우리는 그저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할 ‘권리’만 있다.

선출된 자들은 자신들을 뽑아 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기업과 이윤체제를 위해 봉사한다. 삼성 불법승계 무죄 판결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군장성, 대기업 임원은 대중의 삶을 망치는 결정들을 주도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선출할 수도 소환할 수도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 사회를 지배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부르주아(자본가) 독재”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형용모순

이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적인가’ 하는 회의가 발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서구에서든, 한국에서든 사람들은 많은 경우 투표에 열의가 없다.

유럽에서는 ‘노동당’, ‘사회민주당’, ‘사회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정당들도 체제의 이윤논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서민이 부르주아 정치 일반에 대해 느끼는 환멸은 더 심해졌다. 한국에서 이

명박이 겨우 30퍼센트의 지지만을 얻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소위 ‘개혁정부’ 10년간 진보와 개혁이 전혀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고 투표장에 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단지 자유민주주의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민주화를 위한 대중의 투쟁은 자유민주주의 성취에 머무르지 말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노동자 대중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는 노동자 민주주의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말만큼 형용모순인 말이 없다. 생산수단을 소수가 소유하고 그들의 이윤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시장경제는 진정으로 민주적일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 대중이 사회의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경제체제의 변혁이 있어야 대중의 필요에 따라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 투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침해된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동계급 투쟁을 고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진정한 민주주의 — 노동자 민주주의 — 를 쟁취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화물연대 파업 평가

열사의 한을 푼 화물연대 파업의 성과

6월 15일 조합원 76.5퍼센트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의미 있는 성과 속에 마무리됐다.

구체적으로 대한통운 해고 택배 노동자 38명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보전, 일체의 불이익 금지,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을 보장 받았다. 몇 달 전만 해도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화물연대 탈퇴 등을 요구하던 대한통운이 크게 물러선 것이다.

고(故) 박종태 열사의 염원대로 “길거리로 내몰린 동지들이 정당당당하게 회사에 들어가 우렁찬 목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통운은 5월 19일 일간지 광고에서 “고인(박종태 열사)은 대한통운과는 고용 또는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통운은 이번에 고(故) 박종태 열사 유가족 보상 지급에 합의했고, 화물연대와 실질적 교섭을 했으며, 노조 공식 체계인 ‘분회’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실상 화물연대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그 점에서 이번 파업이 “노조의 판정패”(〈매일경제〉)라는 일부 보수 언론의 과장은 자기 위안일 뿐이다.

지난해 촛불항쟁의 지지를 받은 화물연

대 파업에 굴복한 후, 이명박 정부는 보복의 칼날을 갈아 왔다. “표준요율제” 도입 합의도 지키지 않고 화물연대를 운수노조에서 제명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항만 봉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6·10을 전후해 반이명박 정치투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더 확대되어 이런 투쟁과 결합될까 두려워 한발 물러서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5월에도 화물연대와 연대 투쟁을 선언한 건설노조에게 양보해야 했다. 화물연대를 운수노조에서 제명

하라던 얘기도 쏙 들어갔다.

물론 합의문에 “화물연대” 명칭이 명기되지 못한 것과 노동기본권 쟁취로 투쟁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렇려면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를 통해 정부와 정면 대결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조합원들의 파업대열이 단단해야 하고 비조합원으로 파업이 확산돼야 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연대 투쟁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경기 침체 여파로 운송량이 크게 줄어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과 비조합원들의 지지·동참 정도가 지난해

파업에 비해 크지 않았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일정도 7월 초로 맞춰져 있었다.

이런 주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엔 화물연대 파업이 여론의 지지 속에서 대한통운의 양보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문제를 쟁점화하며 야당들의 법 개정 노력 약속도 받아낸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이 성과가 각 현장에서 운송료 삭감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확산돼야 한다. 나아가 “열사의 염원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 쟁취하기 위한 투쟁”(화물연대)으로 발전해야 한다.

김문성 객원기자 | enlucha@left21.com

이란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란 지배자들이 분열하고 있다

사이먼 아사프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이란 대선과 뒤따른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로 이란 지배계급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국영기업 민영화의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강경파’가 통치하고 있다.

이 분파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주위에 결집해 있다. 그들은 아흐마디네자드의 포퓰리스트적 호소력을 이용해 이란 사회의 뿌리 깊은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봉쇄하려 했다.

또 다른 지배계급 분파는 체제에 부패가 만연하면서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이란 경제를 개방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의 권력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종교계 고위 인사들도 일부 포함하는 이 분파는 대선 운동 기간 중 아흐마디네자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로 떠오른 호세인 무사비에게 기대를 걸었다.

무사비는 주류 인사다. 그는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총리였다. 그는 1979년 혁명 이후 이슬람주의 운동이 영향력을 획득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는 전시에 경제를 잘 운용해 존경 받았고 권력을 보장받은 듯이 보였다.

엘리트

그는 1989년 총리직이 폐지되면서 권력에서 밀려났고, 1990년대 동안 성장하는 개혁파 운동과 연관을 맺었다. 개혁파는 이란 신엘리트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싶어 했다.

무사비의 목표는 이란 경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방’ 하는 것이었다.

1997년 무사비는 대선에 출마할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무명의 성직자 모하마드 하타미에게 개혁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하타미는 개혁을 바라는 이란인들의 상징이 됐고, 80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그러나 하타미는 2001년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약속한 개혁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권좌에 앉힌 개혁파 운동은 사기저하를 겪었다.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는 부패를 뿌리 뽑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을 줄이겠다고 약속해 대통령에 당선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엄청나게 증대한 이란의 부를 통제했다. 그는 이 돈을 이용해 도시와 농촌



사진 출처 David Mohammad Vaghoobi

6월 16일 테헤란의 선거 부정 항의 시위. 녹색은 무사비 진영의 색이었다.

빈민 사이에서 지지 기반을 다졌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는 감자를 공짜로 나눠 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배자들 중 일부는 아흐마디네자드가 석유로 번 돈을 탕진하면서 유가 하락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많은 아흐마디네자드 지지자들은 그가 부패 청산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실망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번 대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선거 운동 초반의 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의 지지율은 2위인 무사비의 갑절이었다.

그러나 그 후 여론조사들을 보면 무사비의 선거 운동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하타미처럼, 무사비도 많은 개혁들을 약속했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의 폭을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무사비의 핵심 공약은 정부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란의 재원을 좌우하던 일부 엘리트들에게 위협이었다.

무사비는 국영 부문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중으로부터 외면 당했다. 그래서 무사비는 동시에 포괄적 사회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옷차림과 행실을 엄격하게 감시·단속하는 무시무시한 ‘도덕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고위직을 여성에게 개방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경찰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보안경찰은 선출되지 않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지휘를 받는다.

무사비와 다른 개혁가들은 이란 사회의 점증하는 불만을 이용해 지배계급 경쟁 분파를 권좌에서 몰아내려 했다.

개혁파들은 아흐마디네자드와 강경파를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동시에 개혁파들은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제어하려 한다. 월요일(6월 15일)에 무사비는 사람들에게 거리에 나서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무사비와 개혁파 동맹의 의도와 달리, 이 운동은 순식간에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 배신과 뇌물로 점철된 이란의 기성 체제

이란은 부패로 큰 고통을 받은 국가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과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

소상공인들도 계약을 따내려면 상당한 ‘보너스’를 관리들에게 상납해야 한다. 부패가 워낙 만연하다 보니 상당수 지배자들이 국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야톨라 잘랄레딘 타헤리는 이란의 남부 도시 이스파한의 유력 인사다. 그는 2002년에 “지켜지지 않은 혁명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금요일예배 설교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임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특권층 자제들(성직자의 아들들)과 엘리트들이 더 많은 부를 얻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란의 국부를 약탈하는 자들이여, 무슬람들의 부가 자기 개인의 것이고, 이란을 상속 가능한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여, 나는 그대들 때문에 수치심이 든다.”

그는 친정부 민병대를 매우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민병대들을 “독재의 앞잡이이자 용병,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미친듯이 곤봉을 휘두르는 깡패”로 묘사했다.

이런 불만이 광범하게 퍼지자 이란 의회는 고위 관료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한때 아흐마디네자드의 동맹이었던 압바스 팔리즈다르에게 맡겼다.

팔리즈다르의 조사로 지배자들의 핵심부까지 부패의 사슬에 깊숙이 얽여 있음이 드러났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의 위원들, 이슬람 혁명수비대, 정보부 장관, 심지어 전(前)대통령 아야톨라 하세미 라프산자니까지 부패에 연루돼 있었다.

그중 가장 큰 부패 스캔들은 한 고위 성직자의 아들이 운영하던 대형 국영 무역회사 알마카셈 민영화 과정에서 터졌다. 무려 1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팔리즈다르는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교리상의 이견, 신성모독, 마약 밀매 사건 등을 다루는 혁명법정을 꼽았다.

그는 돈과 힘이 있는 자들이 제아무리 불리한 증거가 많아도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정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자비심도 보이지 않았다.

팔리즈다르는 자신의 보고서 발간이 방해받자 대학가를 순회하면서 부패한 관료들과 부패 사업들의 목록을 폭로했다.

그는 2008년 6월 체포된 후 행방이 묘연하다.

혁명으로 탄생한 국가

크리스 뎀버리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30년 전 팔레비 왕정을 타도한 막강한 대중 항쟁으로 탄생했다.

팔레비 독재 왕정은 1953년 CIA와 영국 정보부가 조직한 쿠데타로 집권했다. 이 쿠데타는 당시 이란인들의 지지를 받던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과 미국 지배자들은 모사데크가

당시 영국 소유의 ‘영국-이란석유회사’(지금의 BP)가 운영하던 이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한 것에 크게 분노했다.

팔레비 왕정은 미국과 영국의 중요 동맹이 됐다. 팔레비의 통치 아래 엄청난 부의 집중과 끔찍한 빈곤이 공존했다. 정치적 반대파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1977년 석유 수입이 줄고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테헤란 남부에서 빈민들이 항쟁을 벌이고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파업 물결이 시작됐다.

1978년에는 팔레비의 독재에 맞서는

저항이 매일 발생했다. 석유 기업 노동자 3만 명의 파업이 팔레비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이것이 총파업으로 확대되면서 경제를 마비시켰다.

소라(파업위원회)

선출된 파업위원회가 작업장 운영과 식량 분배를 통제했다.

군대의 일부도 시위에 가담했다. 1979년 1월 항쟁이 일어나 여전히 팔레비에게 충성하던 보안군을 물리쳤고, 팔레비는 결국 서방으로 망명했다.

파업위원회(소라)가 작업장을 운영했고 농민도 소라를 결성하고 토지를 점거했다.

권력은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이란 좌파는 이란에서 사회주의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진보적’ 자본가와 연합해 국가를 근대화하자고 호소했다.

이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다. 1979년 2월 야권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망명지에서 귀국하고 자신을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선언했다.

호메이니는 소라를 “이슬람에 반한

다”고 비난했다. 호메이니 지지자들은 질서 유지 요구와 미국 반대 캠페인 — 미국 대사관 점거로 정점에 달했다 — 을 결합했다.

호메이니 정부는 조금씩 자신감을 획득하면서 탄압 수위도 높였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도록 이라크를 부추기자, 호메이니는 그 기회를 이용해 전권을 장악했다.

1979년의 기억 — 대중 파업, 대중 봉기와 소라 — 은 이란 지배자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

국제

미국 제국주의의 최전선 파키스탄의 새로운 재앙

최근에 미군과 파키스탄 군대가 스와트(Swat) 지역에서 벌인 군사 공격으로 파키스탄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제프 브라운**이 현 상황을 살펴보고 카라치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 **아심 잔한테**서 군사 공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키스탄의 좌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들어 봤다.

[2009년] 5월 초순부터 버락 오바마의 ‘아프파 전쟁’ 전선은 인구가 1백 50만 명이고 산악 지대인 파키스탄 스와트 지역으로 확대됐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자동차로 몇 시간 걸리지 않는 스와트는 이른바 ‘파키스탄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계곡 지대인데, 치안이 불안해지자 2년 전 이 지역의 모든 스키 리조트가 문을 닫았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부패한 지주들의 지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은 팍팍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국내외 대도시로 이주했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지난 25년간 이곳에서 천천히 입지를 굳혀 갔다. 최근에 <뉴욕 타임스>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로빈 후드를 자처하면서 대지주들을 겁주 대지주 일부는 도망쳤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 급진 이슬람주의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마울라나 파즐루라다. 그는 오토바이와 트럭에 송신기를 장착한 FM 라디오 지역 방송국을 차렸다. 파즐루라와 그의 동료들은 수십 개의 마을에 공식 법정에 대항하는 샤리아 법정을 세웠다. 그들은 딸을 학교에 보내거나 서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의 파키스탄 전쟁의 목표물은 알 카에다다. 미국은 주로 무인 폭격기를 이용해 알카에다를 공격했다. 십여 차례에 걸친 폭격으로 알 카에다 지도자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7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페트레이어스의 전(前)참모 데이비드 킬컬런은 “적종률 2퍼센트에 부수 피해 98퍼센트는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폭격이 자아낸 분노는 파즐루라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를 늘렸을 뿐 아니라, 파키스탄 군대의 전투력에도 영향을 끼쳤다.

많은 병사는 파즐루라와 이슬람주의 민병대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병사들은 그들을 동료 파키스탄인이자 무슬림으로 여긴다.

1980년대 이들의 부모 세대 때 무자헤딘(저항군)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웠고, 미국은 파키스탄이 무자헤딘을 훈련시키고 지원하도록 돈을 대줬다. 파키스탄에 해마다 10억 달러씩 군사원조를 제공하더라도 미국이 파키스탄군에게 저항세력 공격을 명령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군사 공격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인 지난 4월에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파키스탄인들이 이슬람 무장 조직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런데도]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과 근본주의자들에게 타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키스탄군이 저항세력 섬멸에 나서는 것이 미국의 소망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미군과 파키스탄 군의 스와트 공격으로 난민이 된 아이들

제프 브라운: 최근에 벌어진 공격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심 잔: 스와트 지역에 대한 첫 번째 군사 공격은 2007년 11월 무사라프 정권 아래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90만 명이 난민이 됐지만 “국가의 권위를 세우겠다”던 목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 공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을 분쇄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군사 공격은 2008년 7월에 시작됐는데, 이때는 아프가니스탄 접경의 바자우르와 키베르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스와트에서만 65만 명, 바자우르에서 45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지만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군사 공격은 2009년 4월 26일, 공식적 “군사 행동 중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북서변경주 정부가 지금은 무장해제한 옛 무장 단체 ‘이슬람을 법실행운동’과 권력 분할 협정을 맺었던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마드라사 [이슬람 교육기관] 소유주들이 ‘이슬람을 법실행운동’을 이끌었고, 이 단체는 1984년부터 이슬람 율법 실행을 주장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이맘들이 스와트 지역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슬람을법실행운동 같은 전투적 단체들을 분쇄해 지역 칸[부족장이나 지주]의 지배를 복원하려는 [파키스탄]

국가의 계획은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옛 지배계급인 칸과 다른 유지들의 경제력은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농업과 지역 교역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로 이 지역에 유입된 신흥 중간계급은 땅을 매입·개발하는 데 열성일 뿐더러, 취약한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끔찍한 전쟁에 이어 불안정한 평화가 찾아 왔습니다. 평화협정에는 빈민계급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다. 이슬람을법실행운동은 옛 질서에 도전했다가도 결국 옛 질서와 타협하는데, 이 운동이 사회의 근본 모순인 계급 모순을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이슬람주의 저항세력은 칸을 비판해서 하층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칸의 지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또 다른 억압적 질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교착 상태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파키스탄군의 사상자 숫자가 크게 늘고 지역에서 저항이 커지고 군사 작전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거듭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아와미국민당이 평화를 약속하며 북서변경주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아와미국민당이 대중의 압력을 받아 평화협정을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4월 말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이 공격으로 2백5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카라치의 노동계급 거주지 란디로 매일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난민을 위한 구호 시설이 세워졌고, 심지어는 군대의 공격을 지지하는 정당들도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주요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군사 작전은 파키스탄의 대통령 자르다리의 미국 방문과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토착 지배자들의 독자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력에 반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탈레반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됐습니까?

파키스탄의 사법 체계는 뿌리부터 썩었고 오직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합니다. 파키스탄에 편입되기 전 군주정 국가였을 때 스와트 지역은 훨씬 더 효율적인 사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 편입된 지 3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옛 체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주요 현안인 토지 소유권 분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런 요구가 더 강해집니다.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스와트에서 권력을 잡고 나서 탈레반은 반(反) 탈레반 또는 정부 쪽 사람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부유한 지주들도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권위주의적 버전의 이슬람에 반대합니다. 당연히 자유주의 엘리트들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언론의 99퍼센트는 [파키스탄]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탈레반 수백 명을 사살했다는 따위의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독립적 보도는 없습니다. 언론은 현재 벌어지는 극악무도한 전쟁 행위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키스탄군

국제

의 군사 작전을 지지하면서 ‘국가 속의 국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군사 작전의] 잔혹함을 인식하면서도 저희에게 이렇게 반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다른 해결책이 있소?”

좌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좌파는 매우 취약합니다. 저희는 활동하면서 종교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 반대에 저항할 의지가 가장 강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와 자유주의자 들은 대단히 혼란스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레반을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아 갈 야만인으로 볼 뿐입니다.

둘째, 파키스탄에서 좌파는 대부분 노동 대중이 아니라 중간계급 지식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위기로 지식인들은 얇은 진보적 껍데기를 벗어 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파키스탄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우리는 파키스탄을 지켜야 한다”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슬람화에 공포를 느낀 나머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저지할 저항을 건설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종교적 성향을 가졌으나 자맛 에 이슬라미(Jamaat e Islami)나 자미아트 에 울라마(Jamiat e Ulama)처럼 지도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려고 국가와 타협하고 저항세력을 공격하는 주류 종교 정당에 신물 나기 시작한 사람들과 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다면, 종교적 성향이 있는 이들도 나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작전이 단기전이며 외과 수술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중은 스와트 지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도심에서 반전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파슈툰족이 대거 거주하는 란디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전략이 장기적이며 전쟁이 수년 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란디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이 재난의 원인인 전쟁을 멈추라는 압력을 넣으려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른 이들은 굶주리는 사람들(난민)을 돕고자 모금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스와트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벌어질 게릴라 전쟁이며 북서 변경주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재난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주요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 차승일

출처 영국의 사회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9년 6월호

중동

오바마의 카이로 연설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인가?

오바마가 6월 초 이집트 카이로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언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동요하고 있다. 이 연설은 미국 제국주의의 곤경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카이로대학교 학생들에게 기립 박수를 받는 광경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새로운 평화 구상” 발표 장소를 이집트 수도로 선택한 것은 상징적이었다.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한 달 동안 지속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공격을 선언한 곳도 카이로였다.

조지 부시가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하려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바뀌지 않은 것도 있었다. 오바마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비난했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전쟁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카이로대학교 연설은 조지 부시의 그 유명한 2002년 국정 연설 논조와는 달랐다.

그때 부시는 “악의 축”과 “십자군” 운운한 반면, 오바마는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역사적 공헌을 칭송했다.

오바마는 또한 이라크 전쟁 패배와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그는 심지어 1953년 미국이 이란 민중의 지지를 받던 모사데크 정부를 전복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이란에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논조 변화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다.

오바마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슬림이든, 기독교도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60여 년 넘게, 그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떠돌이 생활의 고통을 감내해 왔



사진 출처: 백악관

오바마의 연설에서 나타난 모순은 미국 제국주의가 처한 곤경에서 비롯한 것이다.

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황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바라는 존엄과 기회 균등,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정당한 염원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구절에서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수백년 동안, 미국의 흑인은 채찍질을 당하며 노예의 고통을 겪었고 인종 차별이라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를 획득한 것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건국 이념들을 평화롭게 그리고 굳건하게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긴장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바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처럼 고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오바마의 연설은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총선에서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제한된 주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서 승리했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요르단강 서안 지방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많이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서 쪼가리(부시가 서명한)를 흔들어대며 워싱턴 정가를 들쭉시키고 다녔다.

오바마는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요르단강 서안 지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봉쇄를 중단하고 포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네타냐후는 지금 오바마 연설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할 순간이 이제 급속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라는 악령과 대면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마이크 곤살레스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 부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현대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다룬 글들을 써 왔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대다수 다국적 급속 기업들을 국유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차베스는 몇몇 석유 기업들과 향만·공향, 일부 식품 기업을 국유화한 바 있다. 또, 임원들의 연봉도 깎았다고 했다.

그를 회장이자금의 대부분을 횡령한 스탠퍼드은행의 베네수엘라 지사도 국유화했고, 거대 금융 그룹 산탄데르는 행이 소유한 방코데베네수엘라도 국유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으며 곧 인수할 예정이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베네수엘라가 의존하는 석유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베네수엘라도 예외일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농업을 완전히 가동하면 자급자족도 가능한데 상당한 양의 식료품을 수입한다. 수입 억제나 핵심 식품 기업의 국유화도 전체 국민 수요의 일부만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식료품 보조 정책(메르칼)으로 최악의 기아 사태만 당장 막고 있는 상태다.

석유 생산의 국가 통제는 라틴 아메리카의 볼리바르식 혁명에서 핵심이다. 따라서 우익이 통제하는 주요 석유 생산 지역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PDVSA(페데베사)는 여러 협동조합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보건·교육·주택 같은 사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그러나 2009년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주요 분야들만 예산이 배정됐다. 2010년에도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사회 프로그램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타냐후는 몇 주 안에 동맹군으로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강력한 미국 정부나 아니면 연립정부와 그가 속한 당의 당원들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긴장은 중동에서 제국주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밝히 보여 준다.

오바마는 미국과아랍의 친미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알력은 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미 정권에 대한 평범한 아랍인들의 뿌리 깊은 증오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고, 어떤 정부들이 아랍 세계를 지배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와 핵탄두 50여 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자신만만하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미국과 그 밖의 서방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 카이로와 나머지 아랍 나라 수도들에서 대중 시위가 더 많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에 대한 대중의 반감 때문에 중동의 친미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아랍 정권들은 미국에게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의 연설은 미 제국주의가 직면한 심각한 곤경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그의 기대가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오바마의 실패를 절실히 원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이먼 아사프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기자

번역 정종수

로 차베스에 대한 지지율이 60퍼센트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지지가 차베스 정부나 그 관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 전반의 상태, 불안정, 비효율적 사회 구조가 차베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노동조합 활동가 3명과 많은 농민 운동가들이 살해당했다. 그래서 일부 주요 기업들의 국유화는 대체로 경제 구조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일부라기보다 난국 수습용이다.

또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를 특징짓는 요소인 민중 권력은 여전히 현실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경제와 사회를 진정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도 심화할 것이다. 차베스와 볼리바르식 혁명을 신뢰하는 바로 그 계급들이 경기 침체의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번역 김승현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드러난 유럽 좌파의 현황

다함께 회원 최일봉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WP)의 크리스 하먼과 알렉스 캘리니코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EK)의 파노스 기르가나스, 캐나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의 미셸 로 비두한데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 들어봤다.

북취와 번역은 국제연대 활동가들이 천경록과 박준규가 했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일봉이 삽입한 것이다. 본문에서 ‘급진좌파’라는 용어는 주류(우파) 사회민주주의자보다 왼쪽에 있는 정치 경향을 두루 아우르는 유럽 좌파 특유의 표현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 먼저 크리스 하먼이 말문을 열어 달라.

크리스 하먼 독일과 프랑스 동지들이 빠진 상황에서 유럽 상황을 논하는 것이 어떻게 덴마크 왕자가 없는 햄릿 같다. [참석자 웃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배했다. 특히 영국 노동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보수당과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독립당에 이어 3위로 추락했다. 나치[영국국민당]도 유럽의회에서 2석, 잉글랜드 북부에서도 2석을 차지했다. 이런 모습은 외견상 마치 전반적인 우경화인 양 사람들을 눈에 비쳐진다.

급진좌파의 경우, 프랑스의 반자본주의 신당(이하 NPA)과 독일의 디링케[독일의 좌파당으로, 프랑스 좌파당 창립에 영감인 된 원본]는 기대 이하의 득표를 했다. NPA의 경우 공산당과 좌파당[사회당 좌파가 사회당에서 분리해 나와 만든 정당]의 연합보다 낮은 득표를 했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브장조노의 득표에 한참 못 미치는 득표를 했던 조제 보베[유럽생태운동연합 후보로 나옴]보다도 낮은 득표를 했다.

영국·그리스·동유럽 같은 경우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실업 문제뿐 아니라 공공부문 관련 다양한 쟁점들이 논란이 분분한 난제였다. 혁명적 좌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파노스 기르가나스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대거 패배했지만 우파도 별로 지지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신민주주의당[그리스의 주류 우파 정당]의 득표는 추락했고(43퍼센트에서 32.3퍼센트), 프랑스의 사르코 지도, 독일의 메르켈도 마찬가지였다.

투표 불참률이 높았고 정치 양극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지난해 12월의 대규모 항쟁은 양극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 [신민주주의당의 왼쪽에서] 사회당(36.6퍼센트)은 자신이 신민주주의당의 대안임을 내세우며 약진했고, 녹색당도 3.5퍼센트 득표했다. 그리고 [사회당의 오른쪽에서] 국무파 LAOS[국민정교화대회]가 양극화의 수혜를 입으면서 기존의 5퍼센트 득

표율을 7.2퍼센트로 끌어올렸다. 그러므로 주류 정치권 내 양대 정당 모두에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급진파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급진좌파들이 그 수혜를 보지 못했을 뿐인데, 급진좌파연합, 즉 쉬리자[SYRIZA]는 1년 전 여론조사에서 15~17퍼센트 지지율을 보였다가 이번엔 4.7퍼센트 득표율로 지지가 크게 줄었다. 이는 분명 커다란 위기로, 쉬리자 내에서 좌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 내 우파는 선거 실패가 ‘초파파들’ 때문이라며 쉬리자가 사회당이나 녹색당의 길을 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리스는 우경화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공산당과 쉬리자의 소심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쨌든 급진화의 흐름은 있는데, 파면화된 급진화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 하먼 그리스 극좌파의 성적이 궁금하다.

파노스 기르가나스 그리스 극좌파 연합인 에난타이[ENANTIA, 즉 반자본주의좌파연합]는 두 세력이 주축을 이루는데, 하나는 공산당에서 왼쪽으로 떨어져나온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SEK]다. 이 둘의 득표를 합치면 2년 전 총선에서는 2만 3천 표였는데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2만 2천 표였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아 득표율은 더 올랐다. 그래서 좋은 결과라고 평가받는다. 이를 계기로 ENANTIA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지낼 수 없을 거라던 양대 세력이 함께한 것만으로도 성과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하나는 급진좌파의 위기가랄 할 만하다. 쉬나스파스모스·디링케·NPA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중 쉬나스파스모스[SYNASPISMOS, 즉 좌파운동·생태운동연합 유러로뮤니스트들로 쉬리자의 압도 다수파를 이룸]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디링케는 기껏해야 사회민주주의의 좌파이고, NPA가 가장 급진적이다. NPA는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브장조노가 기록 센트(은 자신이 신민주주의당의 대안임을 내세우며 약진했고, 녹색당도 3.5퍼센트 득표했다. 그리고 [사회당의 오른쪽에서] 국무파 LAOS[국민정교화대회]가 양극화의 수혜를 입으면서 기존의 5퍼센트 득



6월 10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10퍼센트를 얻어 약진한 포르투갈 좌파들쪽 당원들

진좌파의 이 같은 상황은 새삼스러운 것이 없진 하다. 비록 보수당도 2004년에 비해 득표율에 별반 진전이 없진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 이번엔 10퍼센트를 득표했고 아일랜드에서는 사회당이 유럽의회 의석을 얻었고, 아일랜드 SWP[영국 SWP의 아일랜드 자매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선거연합인 ‘인간이 이윤보다 우선’은 더불린 근교의 지자체 선거에서 5명의 당선자를 냈다.

따라서 우파의 승리라곤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 결집체들의 형성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 NPA의 경우 [공산당과 좌파당에 대한] 최후통첩적 태도 때문에 실패했다고 스타씨스 쿠벨라키스[Stathis Kouvelakis]NPA 당원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자는 평했다. 공산당과 좌파당은 좌파전선[Left Front]으로 연합함으로써 단결을 과시했는데 말이다.

공산당과 좌파당이 단결을 이루는 데서 선수를 친 반면, NPA는 “초강경주의” 태도를 고수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우파는 나치에 맞선 급진좌파의 단결을 호소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단결 호소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쿠벨라키스에 따르면, NPA가 LOI[뤼프 우브리에르, 즉 노동자투쟁당의 실수를 반복한 것, 즉 노동 현장 투쟁 문제에만 집중한 것도 문제였다. 디링케의 경우는 내 직감일 뿐이지만 오히려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어 실패한 게 아닌가 싶다. 독일의 경우는 패러독스다. 경제 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고 디링케에는 라퐁텐 같은 유명 인사가 있는데도 선거 결과가 부진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경우 공산당 후신들끼리 서로 경쟁한 탓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

유럽 급진좌파의 상황 문제는 중요한 주제로, 영국의 우리도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술한’ 토론이 이뤄져도 주변정제를 점점 긴장시키고 있고, 이명박은 이를 이용해 광범한 대중의 민주주의에 감정을 득표했으므로 선거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진술한 평가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유럽의 다양한 급진좌파 프로젝트에 대해 혁명가들이 어떻게 관계 맺느냐는 것이다. 핵심은 혁명적 정치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한국] 상황이 재미있던데 얘기해 달라.

최일봉 아시아시퍼 한국은 서구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곳도 경제 위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와 좌파당이 단결을 이루는 데서 선수를 친 반면, NPA는 “초강경주의” 태도를 고수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우파는 나치에 맞선 급진좌파의 단결을 호소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단결 호소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쿠벨라키스에 따르면, NPA가 LOI[뤼프 우브리에르, 즉 노동자투쟁당의 실수를 반복한 것, 즉 노동 현장 투쟁 문제에만 집중한 것도 문제였다. 디링케의 경우는 내 직감일 뿐이지만 오히려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어 실패한 게 아닌가 싶다. 독일의 경우는 패러독스다. 경제 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고 디링케에는 라퐁텐 같은 유명 인사가 있는데도 선거 결과가 부진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권의 탄압이 혹심하고, 심지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가 법를 개악으로 제반 민주적 권리마저 약화시키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쯤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둘째, 북한 핵무기 문제다. 이것은 한반도 주변정제를 점점 긴장시키고 있고, 이명박은 이를 이용해 광범한 대중의 민주주의에 감정을 득표했으므로 선거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진술한 평가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유럽의 다양한 급진좌파 프로젝트에 대해 혁명가들이 어떻게 관계 맺느냐는 것이다. 핵심은 혁명적 정치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한국] 상황이 재미있던데 얘기해 달라.

최일봉 아시아시퍼 한국은 서구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이곳도 경제 위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각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와 좌파당이 단결을 이루는 데서 선수를 친 반면, NPA는 “초강경주의” 태도를 고수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우파는 나치에 맞선 급진좌파의 단결을 호소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단결 호소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쿠벨라키스에 따르면, NPA가 LOI[뤼프 우브리에르, 즉 노동자투쟁당의 실수를 반복한 것, 즉 노동 현장 투쟁 문제에만 집중한 것도 문제였다. 디링케의 경우는 내 직감일 뿐이지만 오히려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어 실패한 게 아닌가 싶다. 독일의 경우는 패러독스다. 경제 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고 디링케에는 라퐁텐 같은 유명 인사가 있는데도 선거 결과가 부진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노동자 의식의 반등은 노동자 투쟁에 따른 것인가?

최일봉 아직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정치의 위기와 격동, 혼돈에서 비롯한 듯하다. 그래서 노동자 의식의 성격은 여전히 중도화·파적 개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몇 달 뒤에는 큰 노동자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크리스 하먼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미국 경제 위기의 감속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일본과 유럽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경기 반전(反轉), 즉 회복은 아니다. L자형이나, V자형이나, W자형이나를 예측하는 것도 시기상조다.

파노스 기르가나스 경제 위기가 감속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몇 주 전에 독일과 미국 사이에 경제 해법을 놓고 의견 불화가 있었던 것을 보면 경제 위기가 낳는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것 같다. 따라서 급진좌파는 지난 5년 동안 활동한 방식으로 계속 활동할 수 없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반전 쟁점이 올해 초에 비해 분명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해 초에는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당 좌파와 녹색당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갈 것인가 같은 논쟁 말이었다.

미셸 로비두(캐나다) 캐나다에서도 경제 위기 감속 조짐이 보인다. 언론에서는 Stelco[미국철강의 캐나다 주재 기업] 같은 기업이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8백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고용했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에서도 공장들이 재가동된다 등 경제 위기 감속의 징후가 보인다. 그러나 현상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두 명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위기가 대공황 초기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몇몇 주요 경제에서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한 듯하다. 물론 독일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말이다. 정부가 케인스적으로 대처한 것과 일부 공장에

서 재고가 바닥나면서 생산이 재개되는 등의 요인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급속한 경기 하강은 끝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위기의 끝은 아니다. 위기의 여파는 계속 확산될 것이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다. GDP[국내총생산]가 5분의 17만 줄어든 전망이다. 케인스적 부양책을 감당할 수 없는 주변부 나라들은 이토록 취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 회복보다는 침체의 장기화가 더 우려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반전 쟁점이 올해 초에 비해 분명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해 초에는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당 좌파와 녹색당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갈 것인가 같은 논쟁 말이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독일과 미국 사이에 경제 해법을 놓고 의견 불화가 있었던 것을 보면 경제 위기가 낳는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것 같다. 따라서 급진좌파는 지난 5년 동안 활동한 방식으로 계속 활동할 수 없다.

미셸 로비두 캐나다에서도 반전 시위의 규모는 줄었다. 가자 침공에 대한 항의와 갤러웨이[선명한 반전 입장으로 노동당에서 출당당한 유명한 영국 국회의원의 캐나다 방문 불허 방침에 대한 항의 시위는 제법 컸지만 전반적으로는 반전 운동이 가라앉는 분위기다.

파노스 기르가나스 지난 6~7년간 급진좌파는 반신자유주의·반전 운동을 동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퇴조하고 있고 반신자유주의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뿐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논해야 한다. 즉, 급진좌파는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NPA의 경우 과거 투쟁 물결의 산물인 브장조노의 유용성은 끝났다. 디링케는 뒤처지고 있고 새로운 현안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그리스의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분석이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새로운 정당이지만 대중과 관계를 맺고 기존 차원에서 투쟁과 운동에 개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현실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가능하기 위해 현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는 말이다. 리스펙트의 경우도 반전 운동의 파도를 타고 뜰 수 있었다. 어떤 점에서 갤러웨이는 이 파도가 잦아드는 것을 SWP보다 먼저 간파하고 몸을 뺐 셈이다. SWP는 반전 운동에 가장 열심히 뛰어든 세력이었던 만큼 반전 운동이 여전히 다시 뜰 수 있다는 환상을 갖기 쉬웠고, 따라서 갤러웨이보다 늦게 간파했다는 지 모른다.

어쨌든 파노스 기르가나스 말대로 2000년대 초에 그랬던 것처럼 급진좌파들이 손쉽게 약진할 수 있는 조건은 사라졌다. 부시의 예전 측근조차 은행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만을 외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모두 좋은 기여를 해줘서 감사하다.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에 대해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크리스 하먼이 지난 2월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에 참석한 뒤 다함께 회원 최일봉과 박준규에게 들려준 참관기를 옮긴 것이다. 최근 유럽 급진좌파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해 게재한다.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 외부으로 참석했다. 창당대회는 큰 성공이었다. 1995년 이후,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은 대중운동에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지지층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집회들을 열면서 NPA 창당대회를 준비했다. LCR 당원이 2천 명인데, 7천 명이 준비 과정에 동참했다고 한다. 창당대회시 당원이 9천 명이 라는 보고를 고려하면 더한층 전진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수동적 지지자들이 아니라 모두 행동가(활동가)들이다.

게다가 충분한 사전 토론을 통해 채택된 강령이 거의 혁명적 수준에 가까워졌다. 국가에 대한 입장, 아래로부터의 변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특히, 당명에 ‘혁명’이라는 말을 집어넣자는 제안이 창당대회에서 있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졌다. 지도부가 적극 나서서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둘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그 러나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좌파적이고 행동가적인 당이다. 혁명적 당은 아니지만 혁명가적인 당이다.

그런 점에서 NPA는 운동의 전진이고 진보다. 그러나 이것이 예기의 끝은 아니다. 문제점들도 있다. 첫째, 올리비에 브장조노의 인기가 엄청 높아 한 조사에 의하면 지지율이 50%까지 올라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 NPA 당원 수는 고작 9천 명이다.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인기에 비해 기층 당원들의 실제 수는 격차가 있다. 1921년 트로츠키는 3만~4만 명의 당원을 갖고 있는 독일 공산주의노동자당을 “3만~4만 명 당원의 대수롭지 않은 정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로운 정당이지만 대중과 관계를 맺고 기존 차원에서 투쟁과 운동에 개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현실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가능하기 위해 현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둘째, 동질성 결여 문제다. LCR은 1991년 옛 소련 붕괴 후, 정치가 불분명해졌고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그 후 언젠가 그 지도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1793년의 자코뱅주의이지 1917년의 볼셰비즘이 아니라고 했다. LCR 당원 개인들을 보면 대부분 혁명가들이다. 그러나 명확한 정치를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 프랑수아 사바도[NPA 활동가이자 제4인터내셔널 실행위원은 제 게바라와 트로츠키를 비교하면서 제 게바라가 낫다고

말했다. LCR은 상당 부분 우리 기대 이상으로 혁명적이었던 후, 정치가 불분명해졌고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그 후 언젠가 그 지도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1793년의 자코뱅주의이지 1917년의 볼셰비즘이 아니라고 했다. LCR 당원 개인들을 보면 대부분 혁명가들이다. 그러나 명확한 정치를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 프랑수아 사바도[NPA 활동가이자 제4인터내셔널 실행위원은 제 게바라와 트로츠키를 비교하면서 제 게바라가 낫다고

말했다. LCR은 상당 부분 우리 기대 이상으로 혁명적이었던 후, 정치가 불분명해졌고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그 후 언젠가 그 지도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1793년의 자코뱅주의이지 1917년의 볼셰비즘이 아니라고 했다. LCR 당원 개인들을 보면 대부분 혁명가들이다. 그러나 명확한 정치를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 프랑수아 사바도[NPA 활동가이자 제4인터내셔널 실행위원은 제 게바라와 트로츠키를 비교하면서 제 게바라가 낫다고

지배계급의 권력 유지 방식을 이해하기

이명박 정부는 경찰 같은 억압적 국가 기구의 폭력을 사용해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공격한다. ‘헤게모니’와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 폭력이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톰 워커의 글은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다. 전 세계에서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간다. 자본주의는 기후 변화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서 지구를 파괴하려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운영 방식은 자본주의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날마다 지루하고 힘든 노동을 해야 하고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고 공과금을 납부하려고 애쓰는 것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체제를 받아들이는 이유를 연구했다. 그는 1918년에서 1921년 사이에 분출한 노동자 투쟁에 참여했다. 1917년 러시아를 휩쓴 혁명에 고무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다.

그는 한때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급진화하고 체제를 바꾸기로 결심하게 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그러나 투쟁은 1922년에 패배했고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람시는 투옥됐다. 끔찍한 환경에서도 그람시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혁명이 러시아에서는 성공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을 거부했다. 그런 해석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노동자들을 자동으로 혁명가로 만들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람시는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지배계급이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만이 최상의 사회 운영 방식이라고 설득하는지 연구했다.

동 의와 강제

헤게모니 이론은 영국 같은 현대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특히 중요하다.

칼 마르크스는 “모든 시대의 지배적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람시는 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켜 어떻게 지배계급이 시민사회의 구조들을 통해 “지적 · 도덕적 지도력”을 유지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람시가 말한 시민사회는 교회 · 학교 · 언론 · 정당뿐 아니라 심지어 노동조합 같은 제도도 포함한다.



안토니오 그람시



6월 10일 범국민대회에서 경찰 폭력 지배계급은 강력해서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강제력을 사용한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이 제도들이 모두 자본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성채와 보루 체계”로 기능한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지배계급의 사상이 “상식”이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가 부를 창출한다거나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주장 따위가 상식으로 여겨진다.

자본주의를 폐지하면 대혼란에 빠지거나 전체주의가 득세한다고들 한다.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공포심과 차별을 부추긴다.

정부는 자신들의 실책을 은폐하려고 무슬람을 속죄양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민적 자유를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었고 그런 공격은 고문과 긴급조치, 재판 없는 구금에서 극에 달했다.

국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투쟁 의지와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터무니없이 불공평한 일이 정상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일처럼 보이게 된다.

사람들은 체제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이나 하고 고분고분 살아야 한다고 믿게 된다. 사람들이 체제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동의에 의한 지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덕분에 정부와 기업은 거의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계속 지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더는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드러운 벨벳 장갑을 낀 철권의 지배를 받는다.

그람시도 지적했듯이 “헤게모니 행사의 특징은 ... 강제와 동의의 결합이고, 이 둘은 서로 보완한다.”

자본주의는 여전히 “강제라는 갑옷”에 의존한다. 비록 영국에서는 이 점이 자주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직종이라도 먹고살려면 일을 해야만 한다. 수도와 전기 같은 필수재의 요금을 내지 못하면 집담판이 들이닥칠 것이다.

영국 국가는 일상으로 공공연하게 탄

압하지는 않는다. 영국 정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공공연하게 반정부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허용한다. 해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국가의 폭력적 본질을 지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흔히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는 편견을 듣는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에만 폭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지배계급은 억압적 국가 기구들을 이용해 더 노골적인 형태의 강제에 의존한다.

의회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가 국가의 “부드러운 벨벳 장갑”이라면 경찰과 군대는 “철권”이다.

영국의 경우 가장 분명한 사례 중 하나는 1984~85년에 벌어진 광원 파업이다. 지배계급은 이 파업이 단지 탄광을 둘러싼 싸움이 아님을 깨달았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의 가장 강력한 부문을 격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이 투쟁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경찰은 피케팅 대열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대체 인력이나 파업 참가자를 보호했다. 주류 언론은 광원들을 비난하고 광원노조의 지도자들을 중상 모략하고 ‘용감한’ 경찰을 편들었다.

법원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는 광원노조의 기금을 압류했다.

오늘날에도 국가 기구는 저항하는 사람들에 맞서 이런 방식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반전 시위나 기후변화 저지 행동, 고용 보장 요구 집회를 위협으로 여긴다.

국가는 경제 위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설까 봐 노심초사한다.

지난해에 경찰은 반전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공격했으며 올해 1월에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잔인한 전쟁에 항의하는 행진 대열을 곤봉으로 진압했다.

올해 4월 G20 반대 시위에서 국가 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시위를 구경하던 이안 톰린슨이 시위 진압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뒤 사망했다.

경찰의 아만적인 시위 진압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국가는 언제나 급진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기꺼이 가면을 벗어 던졌다. G20 반대 시위에서 한 가지 새로운 특징은 카메라폰이 널리 보급돼서 국가 폭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G20 반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분노하는 정서가 점차 커졌다. 지배계급은 경찰 내에 “몇몇 썩은 사과”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 주듯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진정한 억압적 면모가 드러난 것이다.

“철권”은 자본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요즘 더 자주 등장할 것이다. 지배계급은 공포에 질려 강제력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상식”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전략

그람시는 지배계급의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저항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민사회가 강요하는 사상에 도전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파업, 점거와 시위 그리고 저항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는 체제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부자들은 돈다미 위에 앉아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해야 하는가?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작업장을 폐쇄해야 하는가? 왜 국가는 사람보다 재산 보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투쟁 과정에서 이러한 물음이 날카롭게 제기된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지배적인 사상에 도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변신한다. 그와 동시에 계급 내부에서 대안적인 노동계급 문화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상아탑의 학자가 아니라 “조직자이자 지도자”인 “유기적 지식인”이 된다. 이들은 노동계급 대중의 조직과 기구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조직과 기구는 사회주의적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람시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 전략을 내놓았다.

그는 “기동전”, 즉 혁명을 시작하기 전에 “진지전”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지전은 사상 투쟁이고 이 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언론에서, 노동조합 같은 노동계급 대중 조직에서, 학교와 대학에서 체제의 진정한 본질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독자적인 출판물을 내고 노동조합에서 조직하고 학생 단체를 운영하고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혁명정당을 건설하려 할 때 바로 그런 일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더딘 활동은 때려치우고 당장 거리에서 국가의 강제력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많은 아나키스트들의 관점이고 이 관점은 헤게모니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많은 노동자는 지금도 경찰과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배계급의 주장을 믿고 있다.

물리적 대결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 뿐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위대를 공격해서 본색을 드러낸다면 국가는 지금 당장 정말로 중요한 전투인 사상 투쟁에서 우리에게 무기를 건네주는 셈이다.

광원파업을 겪으며 국가의 폭력적 본질을 깨닫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급진화했다. 경찰이 피케팅 대열이나 시위대를 공격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진보적 투쟁과 굳건하게 연대해야 하고 체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고, 우리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직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분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본가 계급의 지배에 직접 도전할 것이다.

번역 천형석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 반대를 강조했어야

최근 한 지인은 나에게 “민주당을 옮겼어 지지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맞선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대연합 선거전략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민주당이 쌍용차 등 노동자 행점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계급연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달리 생각한다. 현재는 한나라당 집권기이고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을 포함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정서는 노무현 집권 때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노동자라고 해서 다르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민주당에 가지는 정서는 복잡하다. 물론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나라당에 맞서 일정 정도 싸워주는 구실을 해 주길 바라는 기대와 의존이 한편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노동자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자들 눈치를 보며 올라탈 수도 있다. 계급 투쟁이 활발히 일어나 민주당의 본질이 확연히 드러난다면 모를까 현재 전체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로 봤을 때 다수 대중이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을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진 않는다. 따라서 계급연합 전략이 잘 추진되

지 않을 거라 안일한 태도로 낙관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레프트21> 지난 호가 우리 운동의 과제로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에 반대하는 것보다 전술적 제휴를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아쉽다.

물론 민주당과 전술적 제휴조차 거부하는 좌파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추진하려는 다수 좌파들의 ‘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강조점이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김은영

민주당의 다계급적 기반을 지적했어야

지난 호 ‘진보진영의 6월 투쟁과 민주당’ 기사는 민주당의 한계와 전략적 공조의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극도로 소심하다”라는 트로츠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대체로 트로츠키의 주장을 한국에 적용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를 오늘날에도 “후발 자본주의”에 견주어 주장하

는 것이 설득력 있는지 고민이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 이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어 지금은 세계 12위의 소제국주의 국가가 됐다. 남한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부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후발 자본주의의 성장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아래로부터의 압력보다 체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에 더 굴복한다는 점

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지위와 민주당이 10년간 집권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능동적으로 펼쳐왔던 것을 본다면 ‘후발 자본주의’의 부르주아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한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다계급적 기반의 한계(특히 대자본에도 계급적 기반이 있다는 점)를 지적하는게 오늘날 더 설득적이지 않을까?

전주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레프트21> 5호 독자편지에서 최일봉 동지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설명했듯이 자본의 세 형태인 생산자본과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은 서로 연결되는 자본의 순환 국면들이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자본주의 의회의 개혁 입법 권력으로는 턱없고 자본 자체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 자체는 옳지만, 이로부터 금산분리 요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달성될 수 없는 “공상적” 요구라고 결론짓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우선, 마르크스는 자본의 대표인 산업자본이 생산자본, 상품자본, 화폐자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계속 변태하며 순환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본 전체로 보더라도 생산자본, 상품자본, 화폐자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계속 순환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본이 이처럼 서로 연결되고 순환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자본으로부터 상업자본이나 금융자본(마르크스의 표현으로 하자면 은행자본 혹은 이자 낚는 자본)의 분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분업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업자본이 분리됨으로써 산업자본의 구성부분에서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상품자본·화폐자본과 상품·화폐 거래 자본(상업자본), 은행자본을 구별해야 한다.

둘째, 자본의 집적과 집중 경향이 산업자본, 상업자본, 은행자본의 상호 융합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20세기 초에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힐퍼딩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지만 그것은 일반적 현실이 아니었다.

최근의 현실을 보자면, 1980년 이래 산업자본들이 금융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도 있었던 듯하다. 혹자는 이것을 ‘금융화’라고 분석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GE를 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 금융 위기 직전까지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은 다들 금융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GM, 크라이슬러 등은 파산 위험에 처하자 곧바로 금융 자회사들을 매각해 버렸다.

따라서 금산분리는 자본주의에서 달성할 수 없는 “공상적” 요구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자본가들도 선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 금산분리 자체는 자본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거나 대중의 삶

을 개선하는 중요 요구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은행 민영화와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이것은 재벌로의 자본 집중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와 신자유주의적 금융 투기 자본 육성과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지배자들은 거품을 더욱 키웠던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에 강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 6위 규모인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을 자주 예로 드는데, 이 은행처럼 변방의 2류 은행에서 인수·합병으로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돼 전 세계에서 투기를 벌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기에서 재벌이 한몫 잡도록 해 주려고 안달이다.

은행 노동자들의 해고에 반대할 뿐 아니라 대중의 반신자유주의적 정서에 공감한다는 측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옳다. 물론 금산분리가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꼭 밝혀야겠지만 말이다.

강동훈

화물연대를 ‘대놓고’ 지지한 강남 촛불

안녕하세요. 강남 촛불 온라인 담당 카오루입니다. 강남 촛불은 2008년 7월에 개설된 지역 촛불 카페 1호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회원분들이 느슨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유대감으로 유지되고 있는 순수한 모임입니다.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물론, 개개인의 생각이나 지지 성향은 자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암묵적인 카페의 틀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수노조, 화물연대 지지 방문’이었습니다. 그것도 3백 명의 비타민 음료와 함께 “대놓고 지지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뽑아 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남 촛불이 운수노조와 화물연대를 응원합니다. 부당함에 용기 내어 싸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촛불이 여러분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회원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다들 즐거워하셨고, 화물연대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업만 뜻 깊은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투표를 통해 대부분의 회원들이 동의한 것이었고 의외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다른 카페에서도 자금을 받아 같은 취지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 제안한 일이긴 했지만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얼마나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고, 화물연대에 대한 의구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면을 보고 계실 화물연대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해 6월 미친 정부가 들어

오려던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몸으로 막아 주신 분들입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시민으로서 커다란 감동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국민 지지파업 1호라는 영예도 얻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눈 가리고 아웅의 제스처였지만) 면박 대통령의 사과도 받을 수 있었고, 추가 협상이라는 ‘단어’나마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여가 지난 지금 변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화물연대 여러분은 더욱 커다란 위기에 당면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6월 7일 일요일 양재 화물 터미널에서 뒤편던 여러분은 너무나 평범한 선배님, 아저씨, 어르신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다시 앞장서 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개인으로서, 촛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힘내시라고 박수치고 함성 같이 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누구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는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언론 조작과 왜곡으로 여러분을 썩칠해도 저희는 사실과 진실을 가려서 바라보고, 주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두손 모아 지지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카오루 강남 촛불 온라인 담당

주신 이 글을 보는 촛불 시민들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촛불이 기존 단체와 연대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촛불 구속자의 편지

5월 1일 노동절 저녁 10시 명동 인도에서 경찰로 보이는 한 무리가 시민들을 향해 갑자기 달려오더니 한 사람이 피하다가 내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순간 욕하는 마음에 7~8명과 싸우게 됐고 나도 볼들려서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돌아 서울 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내게 스프레이 파스와 호신용 3단봉이 들려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하는군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어 한숨 쉬며 좁은 방에 성인 남자 7명이 갇혀 있는데 신문을 보내 주셨군요.

밖에서 가끔 보던 신문인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전엔 이렇게 좋은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상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조건 없이 보내

주시니 감동할 따름입니다. 남들이 진정 민주투사이십니다. 행동하는 촛불 양식이십니다. 나가면 작더라도 저도 돕겠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 면회 올 사람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내고 계실지 모르나, 가능하시면 이분들께도 후원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갚겠습니다. 어려운 운영 조건에 적은 비용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자유, 평등, 광명이 오리라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부족하면 더 많은 희생을 치루더라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 이종우

위기에 처한 미국에겐 북한 군사력도 곤혹스러운 요인

지난 호 ‘진보진영은 북한 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사는 일부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북한 핵개발을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자위권’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무장력으로 막강한 핵강국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도 군사적 패권 전략을 실행하려 한다면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군사력은 전혀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가 중동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핵에 대한 이중적 잣대로 위선의 극치

를 달리는 미국에게 보란 듯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이 미국 제국주의에 신물난 사람들에게는 통쾌한 ‘편지’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또한 반전 활동가들은 종종 ‘테러와의 전쟁’의 위선을 폭로할 때 부시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침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위선이 바로 이란·북한 등으로 하

여금 ‘핵무기 개발’에 더욱 주력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군사적·경제적·사회적(반전 여론 등) 위기에 처한 조건을 고려할 때, 아무리 군사적으로 ‘알량한’ 수준 이더라도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서 군사적 계획을 고려하는 데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따라서 미국이 지금 처한 조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미국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하는 요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우리 운동의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좀더 설득적이지 않을까?

전주현

제10회 다함께 진보 포럼

맑시즘2009

고장 난 자본주의, 대안을 말하다

2009년 7월 23일(목) - 26일(일) | 주최_다함께

참가비_ 하루 : 23일(목) 10,000원, 24(금)~26일(일) 12,000원 / 나흘 : 40,000원

※ 대학생 할인

하루 : 23(목) - 6,000원, 24(금)~26(일) - 9,000원 / 나흘 : 30,000원

※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할인

하루 : 23(목) - 4,000원, 24(금)~26(일) - 5,000원 / 나흘 : 15,000원

참가 신청 방법_ website www.marxism.or.kr | tel 02 2271 2395 | email marxism2009@gmail.com

맑시즘 2009 주제 소개

■ 좌파 경제학자들의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논쟁

좌파 경제학 연구자 6명이 상이한 입장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와 그 대안에 대해 토론한다. '88만원 세대'에 대한 문제제기로 유명한 우석훈, 대표적인 맑시주의 경제학자 정성진, 금융세계화 비판으로 주목받은 이종태가 흥미진진한 분석을 제시하고, 또 다른 3명의 연구자들이 이들의 진단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다.



· 우석훈이 진단하는 한국 경제, 문제와 대안
발제자 : 우석훈 <88만원 세대>, <괴물의 탄생> 저자
토론자 : 설외중



· 맑시주의로 본 오늘의 경제 위기, 원인과 대안
발제자 :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 설외중



· 금융세계화의 시각에서 본 오늘의 경제 위기
발제자 :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토론자 : 설외중

■ 경제 위기 대안 논의, 쟁점별로 파헤치기

우리를 고통으로 내모는 경제위기.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누구는 오바마의 뉴딜을, 누구는 중국을 경제 위기의 해결 처방전으로 여긴다. 누구는 맑스를, 누구는 케인스를, 또 다른 누구는 폴라니를 말한다. 누구는 사회주의를, 누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대안이라고 한다. 과연 경제 위기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지 쟁점별로 파헤쳐 본다.

-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 —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크리스 하먼
- 오바마의 '뉴딜'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장시복
- 중국은 세계 경제 위기의 구원자인가? 이정규
- 맑스 vs 케인스 vs 폴라니
-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 대운하의 새 이름, '4대강 살리기' — 녹색 성장의 길인가? 김정욱
- 경제 위기와 지구온난화 이유진, 장호중

■ 알기 쉬운 자본론 쏙쏙 강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맑스의 자본론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에 자본론 읽기를 뒤로 미루 왔다면, 이 기회에 자본론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전해 보시길.

-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장시복
- 착취와 노동가치 이론 김창근
- 경쟁과 축적, 자본주의의 동학 김정주

■ 경제 위기와 저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하종강

■ 오바마, 미국 그리고 오늘의 제국주의

오바마의 '뉴딜'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장시복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오바마의 수렁이 될 것인가?
탈라트 아흐메드
오늘의 제국주의 — 미국의 몰락과 새로운 강대국들의 부상?
크리스 하먼

■ 오늘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서발턴과 포스트식민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탈라트 아흐메드
마르크스주의는 반생태적인가? 최병두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다

독설닷컴 고재열, 이명박의 민주주의를 말하다 고재열
언론 통제 : 무엇을 위해 재갈을 물리나? 이강택
한국사회의 변혁과 민주주의

■ 진보 운동의 전진을 위해

[패널토론] 진보의 재구성 — 21세기 한국 좌파의 전망
[패널토론] 진보진영,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패널토론] '운동권 가부장제' 논란 — 진단과 해법
88만 원 세대의 학생운동 이원기 (한대련의장), 김지운 (고대내) 전략과 전술
한국 사회의 변혁과 민주주의

■ 북한

북한의 핵과 오바마, 그리고 이명박
[패널토론] 진보진영,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중국

중국은 세계 경제 위기의 구원자인가? 이정규
중국 혁명 60년 — 마오쩌둥부터 시장 개방까지

■ 청년 학생과 투쟁

88만 원 세대의 학생운동 이원기 (한대련의장), 김지운 (고대내)
88만 원 세대의 희망찾기

■ 여성해방 / 성해방

[패널토론] '운동권 가부장제' 논란 — 진단과 해법
'섹시' 열풍 — 성해방인가? 성차별의 또다른 얼굴인가?
세계화 · 이주 · 여성 문헌아
스톤웰 항쟁 40주년 — 게이 해방을 위한 투쟁

■ 도시와 노동계급

[저자 직강]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용산참사 6개월, 개발주의와 그 그늘

■ 환경

마르크스주의는 반생태적인가? 최병두
경제 위기와 지구온난화 이유진, 장호중
대운하의 새 이름, '4대강 살리기' —
녹색 성장의 길인가? 김정욱

■ 라틴아메리카

차베스 집권 10년의 베네수엘라, 한국에 주는 교훈
임승수, 이수현

■ 이주

이주자,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마뎀 알럼

■ 청소년을 위한 교실 밖 이야기

한국 현대사 속의 민주주의
숨 막히는 이명박식 경쟁 교육
다양한 피부색의 교실 : 이주자,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마뎀 알럼
동성애는 비정상인가? — 게이 해방을 위한 투쟁

■ 맑스주의와 기독교

이명박 장로 치하, 예수의 삶을 통해
진보의 희망을 찾다 김규환
맑스주의적 성서 읽기 김원일

■ 과학

다윈 150년,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다윈은 유전자 결정론자였는가?

■ 예술

자본주의와 예술 이기웅

■ 건강과 자본주의

왜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도는가? 박상표

■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① — 마르크스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② — 레닌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③ — 트로츠키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④ — 로자 룩셈부르크

※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marxism.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시즘 2009 연사 소개

해외 연사

크리스 하먼 영국의 좌파 이론자(인터내셔널 소셜리즘)편집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국내에는 최근 출판된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공저)를 비롯해 <민중의 세계사>,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 <오늘날의 노동자계급>,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세계를 뒤흔든 1968> 등 10여 권의 책이 번역 · 출판됐다.

탈라트 아흐메드 인도 출신 여성 사회주의자, 골드스미스 런던대학 남아시아 역사학 강사. 그동안 남아시아 문학, 포스트 식민주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해왔다. 최근 영국에서 <민중주의 시대의 문학과 정치학>(Literature and Politics in the Age of Nationalism:국내 미출간), 2008, Routledge India를 출판했다.

국내 연사

고재열 <시사IN>기자, 블로그 '독설닷컴' 운영자
김규환 <예수전>, <나는 왜 불온한가>의 저자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여성국장
김원일 미국 라씨에라 대학교 종교학 교수 / 미국 성서학회 선임회원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김정욱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정주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김지운 '고대내'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학생, <레프트21>기자
김창근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마뎀 알럼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집행위원장
문헌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세계화의 하인들> 역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훈 <88만원 세대>, <괴물의 탄생> 저자.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이강택 KBS PD, 전 PD연합회장
이기웅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이원기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5기 의장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 · 기후변화 팀장

이정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장하준의 <레노난마 한국경제> 역음.
임승수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의 저자
장시복 목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병두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저자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기획 연재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④ — 칼 폴라니

자기조정적 시장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책 《대폭락 1929》가 잊혀질 만하면 경제 위기가 터져 의도치 않게 스테디셀러가 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 위기는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정설과 이를 설파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급기시해 왔던 주장과 인물들을 올려놓는다. 최근에 칼 마르크스와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도 그 한 예다.

이런 현상의 수혜자 중 한 명이 칼 폴라니다. 정태인은 “케인스와 하이에크가 차례로 30년간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폴라니의 시대”라고 단언했고, 우석훈은 “폴라니가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빈은 시장경제의 대안 체제로 폴라니가 주장한 ‘지역적 계획경제’를 주장한다.

미국에서 닷컴거품이 붕괴한 직후인 2001년에 폴라니의 주저인 《거대한 변환》의 세 번째 판본이 출판됐는데, 이 책의 서문에서 스티글리츠는 반세기 전에 쓰였음에도 폴라니가 제기한 쟁점과 전망이 오늘날에도 그 특징을 잃지 않고 있다며 그에 대한 관심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썼다.

실제로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도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보지 않았던 폴라니에게서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폴라니가 신자유주의의 핵심 공리인 자기조정적 시장에 대한 통렬한 비판자라는 점에서 그의 사상을 음미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폴라니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해당하는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신화를 논박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오스트리아로 망명해 〈오스트리아 국민경제〉의 편집자로 있는 동안 신자유주의의 대부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와 그의 스승 루트비히 폰 미제스(한계효용혁명의 주장자 중 한 명)의 자유 시장 논리를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1933년 영국으로 이주한 뒤 노동자교육협회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구상한 것이 바로 《거대한 변환》인데, 영국 노동자들을 비참한 상태로 내몬 시장경제의 참혹한 현실이 이 책의 저술 동기 중 하나였다.

자기조정적 시장

《거대한 변환》의 핵심 내용은 시장경제가 인류에게 가장 자연스런 제도라는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나 근거가 없는 허구라는 점이다.

아담 스미스는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역하고 거래하며 교환하려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주장하지만, 폴라니는 그것이 근대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폴라니는 교역과 거래의 발전을 통해 시장경제가 출현했다는 진화론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시장경제가 주된 경제 제도로 자리잡은 것은 [중상주의] 국가의 의도적인 정책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방임이라는 신화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폭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경제는 사회의 일부로서 그 안에 존재했다. 그런데 국가는 경제 성장, 국력 신장을 위해 국내 시장을 확장하려 했고, 이는 상품화할 수 없는 토지·노동·화폐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라니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 영향으로 인해 산업이 생산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자기조정적 시장에 내맡기는 과



산업혁명의 결과 거대한 기계에 종속돼 일하는 소녀 노동자

폴라니는 시장경제가 노동(인간), 토지(자연), 화폐(구매력)마저 상품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허구적 상품인 토지·노동·화폐가 등장했고, 자기조정적 시장 기제가 확립됐다.

그러나 폴라니에게 자기조정적 시장에 근거한 시장경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유토피아일 뿐이었다. 사회에 “몰어들어” 있던 경제가 이탈하면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해 불안정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라니는 시장경제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파시즘과 전쟁이며, 파시즘의 원인이 영국의 산업혁명과 리카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파편화하고 붕괴할 위험에 처할 때 등장하는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반작용을 폴라니는 “이중 운동”으로 설명한다. 폴라니는 “노동, 토지, 화폐의 상품화가 언제나 시장경제의 본질이지만, 만일 ‘악마의 맷돌’과 같은 시장 기제로부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조직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회도 잠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합법화되

면서 노조와 노동자 정당이 등장해 사회적 보호운동의 주된 담당자가 됐고, 토지를 시장의 법칙에 내맡기는 시도에 대한 보호운동으로 보수적인 토리당의 입법 활동이 나타났다. 화폐시장에서도 금본위제가 해체되고 통화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이 있었다.

폴라니는 이런 이중운동이 반드시 노동자 계급의 저항 운동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시장의 확대로 인해 사회 조직 전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계몽된 반동세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계층에 속하는 집단들이 자기조정적 시장 기능에 반발할 수 있다.

폴라니가 볼 때, 19세기 영국에서 확립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첫 번째 ‘거대한 변환’이었다면 이런 경향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 두 번째 ‘거대한 변환’에 해당한다. 그가 《거대한 변환》을 쓰고 있던 때(이 책은 1944년에 처음 출판됐다)는 자기조정적 시장경제가 그 종말을 고한 1929년의 대공황이 있었고, 파시즘과 스탈린이 집권했으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다.

뉴딜 정책

폴라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비록 아만작이긴 하지만, 바로 파시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시즘이 “산업과 정치의 영역에서 모든 민주적 제도를 파괴하는 대가를 치르고 성취된 시장경제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폴라니는 파시즘에 대항하려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폴라니에게 시장경제의 위기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다.

그는 금본위제를 포기한 루스벨트에게서 민주주의를 지키면서도 세계 시장의 영향으로부터 국민경제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즉 뉴딜 정책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억제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재촉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폴라니가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은 자신이 격렬하게 비판했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는 고전파의 시장이데올로기에 대한 케인스의 비판을 넘어서 잉여가치와 착취의 문제로까지 사고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폴라니는 제2인터내셔널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접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를 ‘경제주의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르크스의 《1844년 경제학철학수고》를 높이 평가했고 루카치를 통해 물신화나 노동소외를 이해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리카도와 마찬가지로 경제 결정론이라며 기각했다.

폴라니는 1930년대의 위기에 대한 세 번째 해결책으로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을 지지했다. 폴라니가 보기에, 일국 사회주의론은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한 지역적 계획경제의 한 모델이었다. 그는 냉전 때에도 노동자들에게 소련을 방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폴라니는 1930년대의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유토피아는 파산했고 19세기의 시장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그가 불가역적이라고 보았던 그 현상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재림해 얼마 전까지 맹위를 떨치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폴라니는 1930년대의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유토피아는 파산했고 19세기의 시장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대변환

폴라니는 말년에 전(前)자본주의 사회의 특징들을 집중 연구했다. 시장경제를 대체할 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시장경제 이전 사회, 특히 원시·고대 사회에는 자기조정적 시장이 아니라 호혜, 재분배, 교환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폴라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현 사회에서도 호혜는 기부 문화로, 재분배는 적십자 활동으로, 교환은 공정무역으로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대안 사회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 폴라니 자신도 원시·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것은 폴라니의 이론 그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한다.

폴라니는 경제가 사회 속에 포함돼 있다는 의미에서 실체로서의 경제(어떤 이는 ‘살림살이 경제’라고 표현한다)를 제기하며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인간’을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과정이 경제적 과정에 선행할 뿐 아니라 경제적 과정은 따로 독립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 ‘몰어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제가 사회로부터 ‘탈착근할’ 때에도 그에 걸맞는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확립한다. 즉 자기조정적 시장경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 구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폴라니가 말한 사회에서 경제의 탈착근(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거대한 변환(사회적 자기조정)을 통한 사회의 안정성 회복의 논리는 너무 기계적이고 단선적이다.

폴라니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적 계획경제’는 현대에서 다양한 변형으로 제시된다. 생활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또는 지역공동체 등이 그 본보기들이다. 하지만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지역주의적 대안 추구는 언제나 실패했다.

그럼에도 폴라니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일은 고무적이다. 그만큼 시장경제의 허구를 본질적으로 비판한 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는 ‘허구적 상품’, ‘실체로서의 경제’, ‘이중운동’, ‘몰어들기’ 같은 독특한 개념으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 그럼에도 자기조정적 시장에 대한 그의 비판이 빛을 발휘하려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규명한 마르크스의 분석·대안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정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칼 폴라니

리뷰

우원석 영화칼럼

프레임의 정치학



프랑스 누벨바그 — 195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등장한 영화운동인데, 히치콕의 영화들처럼 감독의 개성이 뚜렷한 작품이 훌륭한 영화라는 작가주의 이론을 대중화시켰다 — 의 여성감독으로 유명한 아그네스 바르다의 <이삭 줍는 사람들>(2000)은 아름다운 영화다. 고령으로 손을 떠는 72살 할머니가 하급기종 6밀리 카메라에 조명도 없이 손수 찍었으니 속된 말로 화면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남이 버린 음식이나 썩은 농작물로 끼니를 때우는 프랑스 빈민들을 담담히 관찰한 이 다큐멘터리는 시선이 예리하고 견고하다. 또, 장면마다 기품과 유려함이 흘러넘친다.

그런데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아그네스 바르다의 카메라가 빈민들을 향해 때 영화는 객관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겉버섯이 핀 자기 손을 찍으며 인생을 관조할 때면 더 없이 주관적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객관적 현실이 주인공인 다큐멘터리인가, 주관적 연출이 주인공인 픽션인가. 영화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융합·충돌하고 서로를 부정하는 이 영화의 장르는 무엇인가. 객관성과 주관성, 이 둘의 경계는 영화라는 매체에서 과연 명확한가.

영화에 숨겨 놓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아그네스 바르다는 다큐멘터리 화면에 담긴 것이 순수한 현실일 거라는 관객들의 관습적 기대감을 은근히 허문다.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짓”이라는 피카소의 말을 빌려 적용해 보자면, 그녀는 다큐멘터리의 꾸밈없어 보이는 진실도 본질은 연출되고 가공된 것, 즉 거짓이라고 한다.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짓”

이런 통찰은 두 가지 이유에서 옳다. 우선 어떤 영화든 편집을 거치는데, 편집은 매우 주관적인 선택과 배제의 판단 행위, 즉 연출이다. 필름에 찍힌 현실은 편집되는 순간 생략과 변별의 과정을 겪는다. 이를 통해 현실의 시공간은 차원이 전혀 다른 영화적 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관객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현실을 접한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다. 그들이 접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연출자의 주관적 해석이다.

둘째, 편집을 안 거치더라도 마찬가지다. 촬영행위 자체가 주관적이다. 현실을 찍으려는 순간 촬영자는 프레임 — 카메라 속 사각형 화면 구도 — 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배제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촬영자의 주관, 즉 정치·사회적 관점에 뿌리를 둔다. 그러므로 앤디 위홀드의 <엠포이어>(1964)처럼 편집이 없는 실험 다큐멘터리 — 엄격히 말해 시작과 끝이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에도 편집은 있다 — 나 편집이 필요 없는 스틸 사진들 — 영화는 1초에 24장, 혹은 29.97장의 사진을 빠르게 넘겨보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속성이 사진과 같다 — 에도 주관적 판단, 즉 가공과 거짓은 있다. 미국의 비평가 수전 손택의 말 대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 (혹은 영화를 찍는다는 것 — 필자)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에 간여하고 침범하며 ... 더 결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광우병대책회의 김광일 행진팀장의 책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가 지난해 촛불 시위 인터넷 중계에 대해 보여 준 통찰은 날카롭다. 자발성주의자들은 인터넷 중계가 시위 참가자들의 자발성을 그대로 담았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사실은 자발성과 대비되는 의식적·지도적 요소가 있다고 김광일 팀장은 지적한다. 영화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한 이야기다. 현실을 아무리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 같아도 그 현실을 프레임에 담은 순간, 즉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촬영자의 의식적인 해석이다. 자발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순수한 자발성의 단순한 중계란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이다.

덧붙여, 어떤 이들은 촛불 시위 때 인터넷 중계를 통해 네티즌과 시위대가 쌍방 소통을 했기에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본질을 따져 보면 소통을 한 것은 네티즌과 시위대가 아니라 관객(네티즌)과 연출자(시위 촬영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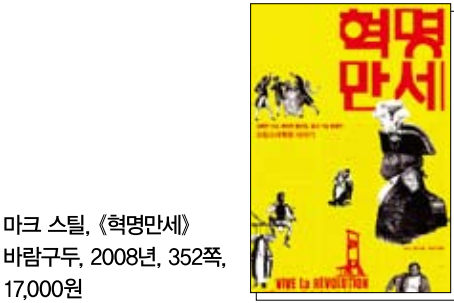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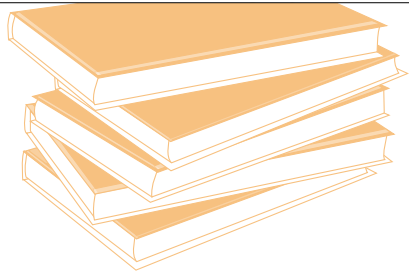
우원석
영화감독 / 뉴욕에서 영화 공부를 했고 지금 작품을 준비중이다



혁명의 시작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민중은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했다.

서평

쉽고 재미있게 만나는 프랑스 대혁명



마크 스틸, 《혁명만세》
바람구루, 2008년, 352쪽, 17,000원

흔히 사람들에게 역사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에게 역사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다는 등,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등 억지로 달달 외우는 것이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 기록권 세력은 역사를 자신들 입맛에 따라 해석한다. 이명박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는 것도, 일본의 극우세력이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역사는 피억압 민중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위해 싸웠던 역사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수히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백여 년 전 프랑스 대혁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 벌어졌던 프랑스 대혁명은 단순히 프랑스 사회만 뒤흔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8세기까지 프랑스는 왕정 국가였다.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과 성직자, 귀족 등의 지배 세력이 무위도식하는 한편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파리메처럼 새까맣게 죽어나갔고, 산 자들은 풀을 뜯어 먹었다.”

지배세력을 제외한 사람들은 제3신분이라 불렸다. 여기에는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 등 부르주아지뿐 아니라 노동자, 수공업자, 소매상인 등 샹클로트(부유한 자들이 입던 짧은 바지 쥘로트를 입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된다.

부르주아는 귀족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고, 흔히 재산도 많았다. 신분제의 념을 수 없는 벽과 봉건제는 그들이 원하는 ‘시장’ 중심의 사회에 불합리한 장애물이었다. 이들은 혈통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재산과 능력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1780년대 프랑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프로이센과의 전쟁, 미국 독립전쟁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쌓였고 잇따른 흉작으로 농민들은 굶주렸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국왕은 제3신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삼부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3신분 대표자들은 스스로를 국민의 회라 칭하며 투쟁에 나섰다. 민중들은 이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고, 결국 7월 14일에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했다.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포했다.

희망을 꿈꾸게 된 민중

파리의 가난하고 굶주린 여성들은 국왕이 있는 베르사유까지 25킬로미터를 행진했고 2만 명의 무장한 남성들이 합류했다. 이들은 국왕을 파리로 끌고와 민중의 감시 아래 두었다. “집이 곧 국가”라며 불과 얼마 전까지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국왕을 말이다.

이처럼 프랑스 대혁명은 “자신의 역할이 섬기는 일이라고 배웠던 민중들이 대거 희망을 꿈꾸게” 된 사건이었다.

영국 코미디언이자 사회주의자인 마크 스틸의 《혁명만세》는 당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민중의 관점에서 쓰여진 훌륭한 책이다.

그는 오늘날 반자본주의 시위 현장과 비교하며 2백여 년 전 프랑스 민중의 투쟁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한다. 사라진 프랑스 왕실과 대비해 ‘살아 남은’ 영국 왕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조롱을 퍼붓기도 한다. 마가릿 대처, 토니 블러어 등 현실의 지배자에 대해 날선 비판과 경멸도 표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쉽고 재미나다. 마크 스틸의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 적절한 비유는 책을 읽는 내내 웃음을 끊이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혁명의 대의를 상징하는 ‘자유’의 모자’를 억지로 쓴 채 파리로 끌려가는 루이 16세의 굴욕적인 모습을 영국 노동당 정치인이 사회주의 신문을 팔면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런던까지 가는 것에 비유한다.

흔히 프랑스 대혁명을 살육의 도가니 정도로 왜곡하는 주장은 여전히 많다. 혁명에 참가한 대중이 “단두대의 피 냄새에 환호하던 군중심리”(서울대 교수 윤석민)를 낳았다는 것이다. 마크 스틸은 이런 왜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반박한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파업도 심각하게 왜곡

하는데 2백 년 전 일은 오죽하겠냐며 말이다.

흔히 혁명의 무자비한 잔혹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공포정치’를 든다.

1793년, 계속되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혁명은 더 나아가지 못하면 반동이 도래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급진파 부르주아지(자코뱅파)에 반대하다가 권력에서 쫓겨난 온건파 부르주아지(지롱드파)는 지방으로 가 반혁명을 선동했고, 왕정 복고를 꿈꾸는 귀족들과 손을 잡았다. 이때 등장한 것이 ‘공포정치’다.

새발의 피

사람들은 구체제가 복귀하면 훨씬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 확신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왕당파 군대가 파리를 점령했다면 자코뱅파보다 훨씬 더 소름끼치는 공포정치가 벌어졌을 것이고, 그야말로 피의 학살을 했을 것이다.

자코뱅파의 ‘공포정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마크 스틸은 당시 상황을 “알카에다가 이미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점령한 뒤 영국을 침략하려고 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비유하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한다.

공포정치는 무엇보다도 “1천 년 동안 지속”(마크 트웨인)된 왕정이라는 진정한 공포정치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됐다.

자코뱅파는 동맹이었던 샹클로트의 요구가 부르주아지가 원치 않는 급진적 수준까지 나아가자 결국 샹클로트 조직들을 탄압했고 혁명은 더 전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낳은 성과는 거대하다. 혁명은 1천 년 넘게 지속된 유럽 봉건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냈고, 자유·평등·이성·과학 등 혁명의 가치는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 나가 근대 세계를 구성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도시와 농촌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위해 영웅적 투쟁에 나선 위대한 경험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정치 팸플릿을 읽고 혁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침략군과 반혁명 세력에 맞서 무기를 들며 직접 역사를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동안만 위대한 자들은 위대하다”(테뮈랭)고 외치며 국왕과 귀족들에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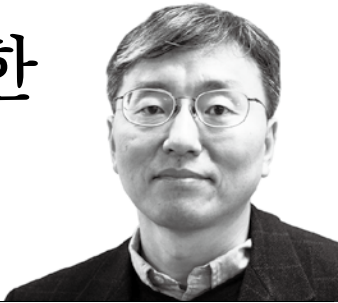
이처럼 “무제한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낸”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감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지를 안겨준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칼럼/논설

정성진 칼럼

1930년대 세계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21세기 세계대공황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의 공저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와 주택 가격 지수, 유로 지역의 GDP 지표, 중국의 수출 지표, 한국의 고용 지표 등은 일각의 ‘경기회복론’과 달리 세계 주요 나라들의 실물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월 중 미국의 실업률은 9.4퍼센트였는데, 이는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미국의 주택 가격지수(S&P/케이스실러 지수)는 지난 3월 전년 동기대비 18.7퍼센트 하락했는데, 이는 전달의 18.6퍼센트 하락보다도 더 하락한 것이다. 미국 정부도 미국 주택가격이 2010년까지 계속 하락해 2006년 대비 총 41퍼센트 내지 48퍼센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GDP는 이미 18개월째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유로 지역의 경우 지난 4월 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1.9퍼센트 감소하고 전년 동기대비 21.6퍼센트 감소했는데, 이는 1991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 1분기 유로 지역의 GDP는 전분기 대비 2.5퍼센트 감소했다. 특히 독일

의 수출은 지난 4월 전월 대비 4.8퍼센트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28.7퍼센트 감소해, 1950년 이래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 지역의 플러스 성장은 2010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세계경제의 두 축 중 하나인 중국의 수출과 수입 역시 지난해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22.6퍼센트 감소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6.4퍼센트 감소했다. 중국의 수입 역시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23퍼센트 감소하고 5월에는 다시 전년 동기 대비 25.2 퍼센트 감소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결과 투자와 내수소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른바 ‘디커플링의 재현’(redecoupling)을 운운했다. 하지만 ‘디커플링의 재현’은 현재 무려 4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의존도(GDP 대비 수출의 비율)를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오히려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소진되면서 중국 경제는 조만간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한국 경제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플러스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4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1만 9천 명 줄어 10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래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 경제의 “경기 하강 속도가 완화된다고 있지만 아직 하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6월 12일)고 말했다.

지금은 21세기 세계대공황의 들머리

올봄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세계 지배계급과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경제 위기의 ‘긴 겨울’이 끝나고 경제 회복의 도래를 알리는 ‘새싹’(green shoots)이 돋아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새싹’은 실은 지난해 가을 이후 세계 주요국 정부들의 천문학적 경기부양, 구제금융, 통화팽창이라는 ‘캠플 주사’의 효과에 지나지 않았으며, 최근 실물경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벌써 ‘노랑게 시들고’ 있다. 그래서 인지 어제(6월 15일) 미국의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필자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저하 공황 이론에 근거해 지난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때부터 이번 세계 경제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21세기 세계대공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누차 주장해 왔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물론 일부 진보진영조차 이런 우리의 주장을 ‘만년 위기론’이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대표적 주류 경제학자 아이켄그린(B. Eichengreen)과 오루르케(K. O’ Rourke)의 최근 연구는 현재 세계경제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잘 뒷받침한다.

아이켄그린과 오루르케는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은 세 개의 그림으로 요약한다. 우선,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2008년 4월 이후부터 2009년 5월까지 14개월 동안 세계 공업 생산의 감소 추세는 1929년 6월 이후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 현재 독일과 영국의 공업 생산의 감소 속도는 1930년대와 비슷한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업 생산의 감소 속도 역시 193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림 2>에서 보듯이 200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세계 주가의 하락 속도와 폭은 1930년대보다 더 빠르고 크다.

끝으로, <그림 3>에서 보듯이 세계 무역의 감소 추세 역시 1930년대 무역 감소 추세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심각하다. 아울러 이 그림들은 현재 세계경제가 1930년대와 같은 세계대공황의 모드로 이미 돌입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경기회복론자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21세기 세계대공황의 단지 들머리에 있을 뿐임을 시사한다.

논설

뜨거운 분노를 지속적 대중 행동으로 이끌어야

지난 6월 1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로 뿔뿔 뭉친 10만여 명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 회복”과 “명박 퇴진”을 외쳤다. 그 한 가운데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펼침막을 든 3백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습도 멋졌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도 교수, 학생, 문화계, 종교계로 들불처럼 번져 가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이명박에 대한 분노는 이명박을 사면조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 한반도 긴장 부풀리기를 통해 찬물을 끼얹으려는 정부의 시도도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분노가 노동자 투쟁과 결합하며 더 크게 분출할까 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도 양보를 통해 마무리지었다.

<조선일보> 주필 강전석은 “6월 10일 서울광장을 메운 군중의 절반은 이명박 정권 1년 4개월의 세월이 불러모았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의 친기업·부자 정책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는 이 나라를 급속도로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를 이명박 정부는 강제와 폭력으로 억눌러 왔다. 6월 10일에도 집회 참가라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한 시민의 목을 방패로 내리찍는 경찰의 ‘살인미수’ 행위가 있었다.

이런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10만 명이나 행동에 나선 것은 노동자·서민이 다시 행동할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의 재벌·부자·삼질을 위한 돈 퍼 주기가 낡은 반짝 ‘경기 회생’과 인플레이 조짐도 고통전가에 맞선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감에 따라... 고통분담에 대한 대가 요구 등 사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래로부터 폭발하는 분노가 기업주들에 기반을 둔 민주당 조차 행동에 나서도록 등 떠밀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들고일어나자”고 호소하게 만들었다. 한미FTA, 비정규직 약법 등을 추진해 온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얼마나 넓게 번지고 있는지 보여 준다.

심지어 일부 우파들마저 “이명박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조선일보>)는 충고를 했다. 생색내기 ‘국정 쇄신’으로라도 국면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은 기껏해야 ‘화장 고치기’만 할 것이다. 반짝 회복 뒤에서 더 커진 거품이 꺼지면서 다가 올 경제 위기에 대비해 이명박은 친기업 정책과 노동유연화라는 ‘국정 최대 과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책이 낡을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반민주적 탄압도 마찬가지다.

화장 고치기

정부는 6·10 이후에도 집회 참가자 소환·체포 등을 계속하고 있고, 북핵 정국을 이용해 정부 비판 세력을 “종북주의 과업에 봉사하는 세력”(한나라당 대변인 윤상현)이라며 친북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위한 MB약법 처리 속도전도 다시 시작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이명박 사과’로 운동의 요구를 제한하려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지난해 촛불 때도 이명박의 “빠져린 반성” 뒤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은 대중적 분노의 열기를 의회와 선거 대비로 돌리며 식히기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발전시키며 열기를 더 높일 때다.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민주주의 공격·MB약법 강행에 광범한 단결과 지속적 대중투쟁을 통해 맞서야 한다. 나아가 쌍용차 대량해고 등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민주 회복을 위한 정치 투쟁과 노동자 경제 투쟁을 상호 결합·발전시키며 두 전선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민주 회복을 위한 정치 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경제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백타이 부대’ 등 노동자들은 6월항쟁의 주역이었고 이어진 7·8·9월 대투쟁은 민주화를 향한 결정적 쐬기를 박았다.

6월 10일 쌍용차 노동자들의 모범이 보여 줬듯이 조직 노동자들의 참가는 고조되고 있는 정치 투쟁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기를 울리며 경제 투쟁의 전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민주당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것도 견제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특검 등을 얻고 국회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는 민주당은 지배계급 개혁파로서 지배계급 보수파인 한나라당에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다. 지난해 촛불이 꺼질 때와 올해 2월 국회 때도 민주당은 그런 타협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MB약법 저지 등을 위해 민주당과 한시적으로 제휴할 때도 민주당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에 대한 분노가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급진적인 정치적 주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주)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쌍용차 점거 파업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은 불황기에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1천5백여 명 강제 퇴직과 9백76명 대량 해고에 맞서 1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공장을 점거하고 싸워서 이명박의 고통전가 정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투쟁의 정당성이 주목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중장비와 완성차, 부품을 동원해 철통 같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경찰 침탈에 대비하며 투지를 드높이고 있다. 분임토론과 조별교육, 집회를 통해 파업대오의 결속도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보게 바뀌었다’, ‘조중동과 경찰을 달리 보게 됐다’, ‘전에 없던 삶의 자신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노동자들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다. ‘노동자 연대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사람도 많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가 되고 있다.

현장조합원 민주주의도 강화되고 있다.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은 “제대로 못하는 점이 있으면 질타하면서 지도부를 바로잡아 주는 등 [조합원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돼 그동안 노조가 제시했던 양보 교섭안을 폐기하면서 파업 대오가 한층 강해졌다.

쌍용차 파업이 전국적 주목을 받으면서 대학생 나눔문화, 소울드레서, 수원촛불 등이 지지 방문하고 한국기독교교장로회 목회자들과 보건의료인들이 시국선언에서 쌍용차 파업 해결을 요구했다. 쌍용차 파업이 반이명박 운동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지가 늘고 있는 것이다.

6월 10일 ‘6월항쟁 계승 민주 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참가는 일종의 전환점이었다. 3백 여 명의 파업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고, 파업 노동자들도 “금메달을 단 기분”이라며 자신감이 고양됐다.

반이명박 투쟁의 또 다른 상징

쌍용차 파업이 반이명박 투쟁의 또 다른 상징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정부의 강제 진압 저지 효과도 내고 있다.

이처럼 쌍용차 노조의 6·10대회 참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따라서 쌍용차 투쟁을 반이명박 정치 투쟁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

화돼야 한다.

사측은 경찰력 투입에 대한 부담이 크자 구사대를 앞세워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른바 ‘노노갈등’을 조장하고, 경찰 투입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6월 16일 구사대 3천여 명을 앞세운 사측의 강제 진입 시도는 실패했다. 결근 처리와 구조조정 대상 선정 등 협박에 못 이겨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이 수십 년 한술밥 먹던 동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에 적극적일 리가 없었다. 이 말 못 할 인간적인 고통이 최근 또 한 명의 노동자를 급성 스트레스성 혈관질환으로 숨지게 했다.

다급한 사측은 용역강제 3백여 명과 관리자들을 이끌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가족대책위의 눈물어린 저지선을 감히 뚫을 수는 없었다. 경기와 충청지역의 금속노동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과 학생 5백 명의 공장 사수 투쟁은 실질적인 힘이 됐다.

이아비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시도는 노동자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승리를 위해서는 더한층 단결을 강화해야 하고, 현장조합원 민주주의를 통해 투쟁대오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점에서 교섭 내용을 그때그때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한상균 지부장의 다짐은 고무적이다.

연대 투쟁도 더 확대돼야 한다. 6월 19일 서울시장 광장에서 상경 투쟁을 하고 20일 평택공장에서 연대 집회를 하겠다는 금속노조의 멋지고 훌륭한 계획은 꼭 성사돼야 한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나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범국민대회 등이 조직돼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등으로 6월 하루가 사실상 끝났다’는 보수 언론의 주장은 그들의 헛된 바람일 뿐이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일정 외에도 공공부문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고, 임시국회는 이명박 앞에 놓인 지뢰밭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언론악법 개악 시도에 맞선 언론노동자들의 투쟁,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투쟁도 준비되고 있다.

쌍용차 파업을 승리로 마무리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에 일격을 가해야 한다.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현대차에서도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이번 현대차 윤해모 집행부의 사퇴는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냈다. 주간연속2교대와 입단협 협상중이었기 때문이다. 사퇴한 윤해모 집행부는 10년 숙원인 주간연속2교대를 망쳐 냈고 생명을 단축하는 주야 맞교대를 없애자는 조합원들의 희망을 저버렸다.

무엇보다 그들은 6월 10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의 파업 일정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고 쌍용차 투쟁 연대에도 소극적이었다. 이처럼 유감스러운 행보를 하던 집행부가 끝내 무책임하게 사퇴한 것이다.

이제 현대차의 활동가들과 현장조직들은 윤해모 집행부가 방기했던 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투쟁을 조직하며 이 공백을 잘 채워 나가야 한다.

시급한 것은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는 것이다. 현재 나를 포함해 현대차 활동가 26명이 연기명해서 ‘쌍용차에 경찰력이 투입되면 연대 투쟁과 파업을 하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현대차 각 식당에 붙였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입문에서 쌍용차 파업을 지지하는 홍보전을 하고 식당을 순회하면서 지지 서명과 모금을 받기 시작했다. 6월 19~20일 금속노조 1박2일 투쟁에도 적극 참가하기로 했다. 첫날인 6월 17일 점심시간에만 1천여 명이 지지 서명하면서 동참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현대차의 활동가들과 현장조직들은 쌍용차 파업에 대한 연대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6월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쌍용차 파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사진 이윤선

“함께해서 승리하자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쌍용차가족대책위의 권지영 씨는 6월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뒤에 있는 동지들이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싸우고 있다. 아이들에게 정리해고가 없는 세상을 보여 줄 수 있게 연대해 달라”고 연설해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6월 15일 평택공장 안에서 권지영 씨를 인터뷰했다.

가족대책위의 활동을 소개해 주시죠.

성실하게 일해 온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가족대책위 활동을 하게 됐어요. 공장 밖으로 내몰리면 길바닥에 내앉아야 하는 상황이

때문에 가족 한 명이 조합원 백 명, 이백 명의 뒤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장에 들어와 보면서 남편이 이 공장 안에서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름에 온몸이 흠뻑 젖도록 일하다가 폐기처분 됐구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조합원들도 파업을 통해서 훈련돼 가지만 엄마들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인간이 돼 간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의 결의가 높고, 악에 받쳐 있지요.

정부와 사측은 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온갖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부도덕하고, 무능력하게 경영해서 3천 명을 길거리로 내쫓고, 이후에도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지 뻔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쥐어짜고 부러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겠지요.

사측 궤기대회에 같이 밥 먹고, 일했던 동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을 노동자들에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쌍차 문제 해결의 키는 정부가 갖고 있어요. 긴급자금 투입해서 공기업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이 있다면요.

우리 남편들이 외롭고 힘들게 싸우지 않게 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정리해고돼 쫓겨날 판이지만 내일은 동지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리해고뿐 아니라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서 굴욕적인 삶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못해 노동자들만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처절하지만 빛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함께해서 승리다운 승리를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간절히 눈물 흘리며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 함께 일손을 놓고 쌍용차 조합원들 옆에 서면 그때는 모두 살 수 있어요. 금속노조가 마치 한몸뚱이처럼 파업해서 저들에게 두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정리 조명지